

주간 통일정세

2015-13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천안함 5주기 행사 비난…“대결망동 말라”(3/28, 조선중앙방송)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7일 ‘서기국 보도’에서 천안함 추모식, 안보결의대회 등과 이들 행사에서 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북한 정권 비판 발언을 거론하며 “엄중한 도발로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극악한 대결망동”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함.
 - 조평통은 이어 남측 당국에 “자신들의 경거망동이 가져올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며 “우리를 무엄하게 걸고든데 대해 온 민족앞에 사죄해야 하며 도발적 모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 박 대통령 천안함 추모사 원색 비난(3/29, 조선중앙통신)
 -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을 동족 대결에 악용하고 있다며 “대결 광기에 들떠있는 박근혜와 그 패당이 집권하고 있는 한 북남관계의 개선에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박근혜가 직접 추모사를 통해 용납 못할 악담질을 또다시 해냈다”며 “우리의 정정당당한 정책과 체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 질하는 불망종(망나니)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거칠게 비난함.
- 북한, ‘남한 간첩사건’ 응징 위협…“관련자 처단”(4/2, 우리민족끼리, 민주조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해외에 나와 반공화국 정탐, 파괴, 테러, 납치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그가 누구이건, 어떤 가면을 쓰고 어디에 숨어 있건 모조리 적발해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하게 처단해 버릴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남한 당국과 보수단체의 ‘간첩 사건’ 부인이 동족대결을 악화한다면서 “우리 혁명의 수뇌부에 대해 감히 흥심을 품고 있는 자들은 이 땅, 이 하늘 아래서 절대로 살아 숨 쉴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 “남한 노동계 반정부운동 지지”(4/3, 연합뉴스)
 - 조선직업총동맹은 3일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노동자들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판관이 시각에 전민항전에 한결같이 떨쳐 일어나 반인민적인 괴뢰보수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담화는 “현 보수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 서 언젠가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함.
 - 담화는 민주노총의 이달 말 총파업 계획을 포함한 노동계의 저항이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라며 “남조선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대중적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고 덧붙임.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대북전단에 무력 대응 거듭 경고(3/26, 우리민족끼리, 민주조선)
 - 우리민족끼리는 25일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북전단을 비난하며 “빠라살포에 대한 물리적 대응은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함.
 - 이 글은 한미군사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전단까지 살포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전쟁 행위’라면서 남측 정부와 군이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함.
 - 민주조선도 ‘반공화국 빠라살포로 초래될 후과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인간쓰레기(탈북자)에 의해 겨레의 운명이 농락당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남한 정부 종북세력 척결 당장 중단하라”(3/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종북론의 정체를 해부함’이라는 제목의 논평원 글에서 “괴뢰 보수패당은 민심과 민족의 분노를 똑바로 보고 자멸을 초래하는 시대착오적인 종북 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밝혔음.
- 북한 “남측 AIB 위해 사드 배치 반대급부로 제공”(3/3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30일 ‘경제적 실익의 간판 밑에 초래될 것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측이 미국에 AIB 가입을 설득하기 위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급부’로 제공했다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의 괴뢰들이 투자은행 참가를 사실상 눈감아 준 대신 사드의 남조선 배치 등 안보 문제에서 남측을 완전히 쥐고 흔들고 있다”며 특히 남측의 AIB 가입 이후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한미군사훈련에서 5·24 조치로 비난대상 조정(3/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5·24 조치는 북과 남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기초해서 협력하고 교류하며 관계 개선을 이룩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 장애물”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5·24 조치의 배경이 ‘반통일’과 ‘북남관계 파괴’라며 “괴뢰패당이 북남 사이의 대화와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무엇 때문에 그것을 근원적으로 가로막는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함.
- 더하여 신문은 북한이 5·24 조치의 배경인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며 “(정부가) 아직까지 고리타분하게 그 누구의 사과와 유감 표명 따위를 떠들며 북남 대결의 근원으로 낙인된 5·24 조치를 한사코 유지하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함.

■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 비난…“대화 기회 사라졌다”(4/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남측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참가한 것을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부정이고 용납 못할 반공화국 도발”로 규정함.
- 신문은 “괴뢰패당이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 모략기구를 한사코 서울에 끌어들이려 하는 데 대해 우리가 한 의미심장한 경고는 절대로 빈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함.

■ 북한, 제주 4·3 사건 67주년 맞아 반미투쟁 선동(4/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제주도 항쟁 용사들의 염원은 실현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인민들은 제주도 봉기자들의 넋을 가슴에 새겨안고 미국의 지배와 예속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과거 1948년 미국이 남한 단독정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민족 분열을 고착화시키려 했다고 하며 제주도 주민들이 이런 ‘책동’에 맞서 “피어린 항쟁으로

민족의 자주와 조국 통일에 대한 꺾을 수 없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함.

- 北북한, 전시 납북 또 부인…“남측이 가족 만남 방해”(4/3,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가 3일 ‘내외의 규탄을 불러오는 비열한 전시납북자 날조 놀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납북자 백상규 씨 사망시 북한으로부터 유해를 인도받겠다는 남한 가족의 요청을 남측 당국이 거부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우리민족끼리는 “백상규 선생이 불치의 병에 걸려 침상에 있을 때 공화국은 남쪽에 있는 그의 가족들이 병문안을 와 간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괴뢰패당이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 거부했다”고 주장함.

- 북한, 통준위 또 비난…“흡수통일 준비”(4/4,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4일 시론에서 당시 사건을 자세히 거론하며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이 북의 제도붕괴를 노린 체제대결의 기구라는 것이 더욱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남한이 “통일지향과 동족의 관계개선노력에 끝까지 도전하며 체제대결로 계속 나간다면 북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면 흡수통일의 꿈을 접고 화해의 길로 나서라고 요구함.

- 북한, 한미 사드 배치 논의 비난(4/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민족을 등진 반역도배들에게 차례질 것은 파멸뿐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합참의장의 지난달 서울회담에 대해 “전쟁광신자들이 이번 기회에 사드 문제를 논의 안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신문은 “도발자들이 우리의 신성한 영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즉시 맞받아나가 침략의 아성을 모조리 초토화해 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고 말 것”이라고 위협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북한 “남한 간첩 두명 체포…극악한 테러분자”(3/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정탐·모략 행위를 목적으로 침입한 ‘남한 간첩’ 김국기와

최춘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함.

- 통신은 26일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 김국기, 최춘길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밝힘.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기자회견에서 이들에 대해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배후 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 수법으로 최고수뇌부를 어찌 보려고 날뻐 극악한 테러분자들”이라고 설명함.

■ 북한, ‘간첩사건’ 내세워 대남 적개심 고취(3/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괴뢰정보원 간첩들과의 기자회견 소식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고 있다”고 밝혔음.
- 신문은 김 씨와 최 씨가 북한의 ‘최고준엄’을 해치려 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 시대의 무자비한 철추를 만나 마땅할 천하만고의 대역죄”라고 비난함.
- 이어 김 씨와 최 씨가 북한의 인권유린을 보여주는 동영상 조작했다고 자백한 사실도 거론하며 “반공화국 인권 모략에 이골이 난 괴뢰정보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가 언젠가도 개선될 수 없다”고 경고함.

■ 북한, 납북자를 ‘재북인사’로…“김일성에 반했다”(3/3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30일 6·25 전쟁 당시 납북된 인사들이 ‘자발적 신념’에 따라 입북한 ‘재북인사’라고 거듭 강변하며 ‘조국통일의 길에서 참 삶을 누린 재북인사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일성 주석이 “북으로 들어온 남조선 정계인사들을 한 품에 안아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줬다”고 주장함.
- 또한 전시 납북자들이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 소속돼 통일운동을 했다며 이 협의회는 ‘남한 출신 정객들의 정치조직’으로, 김 주석의 통일방안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었다고 강조함.

■ 북한 매체, 남측 국민 송환통지 비난…“철면피 극치”(4/2,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일 ‘송환통지문? 철면피의 극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남한 간첩 사건’을 비난하며 “남조선 괴뢰패당이 쓸 것은 송환통지문이 아니라 범죄

- 를 조직하고 간첩을 파견한 데 대한 ‘자백서’, ‘사과통지문’”이라고 주장함.
- 북한은 지난달 26일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으며 남측이 보낸 송환요구 대북통지문 수령을 거부하며 억류자들이 ‘최고수뇌부와 제도 전복을 위해 특대형 범죄행위를 감행한 자들’이라며 이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이틀새 서해로 단거리 미사일 5발 발사(4/3, 연합뉴스)
 - 합동참모본부는 3일 “북한은 오늘 오후 4시 15분부터 5시까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대동강 하구 은율군 해안가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며 “사거리는 140km였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합참은 “이번 발사는 최근 한미연합훈련, 탈북단체의 풍선 날리기 움직임 등과 관련해 대남 압박을 위한 무력시위성 도발로 분석된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北, 개성공단 기업에 ‘임금인상’ 지침…갈등 고조(4/3,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3월분 임금을 인상된 기준에 맞춰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의 지침은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대로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라는 내용이며, 입주기업의 임금 지급을 위한 경리 업무는 북한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어 이 지침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北 「국방委」 정책국 대변인 담화(3.23), 北은 ‘천안함’ 폭침사건(3.26)과 ‘무관하다’며 이와 관련한 ‘5.24조치’ 즉시 해제 주장(3.24, 중앙방송·중앙통신)
-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 관련 ‘몇몇 인간쓰레기들에 의해 거래의 운명이 농락당하는 것을 결코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빠라 살포로 초래될 파국적 후과는 전적으로 괴뢰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3.25,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국가안전 보위부’, 남한 주민 김국기·최춘길을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 적발 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이라며 이들에 대한 국내외 기자회견(3.26, 인민문화공전) 개최(3.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88호(3.30)】 우리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제28차 회의에서의 ‘北 인권결의안’ 채택(3.27)에 적극 나서며 환영 및 서울에 ‘北 인권사무소’ 설치 추진 관련 ‘남조선에 동지를 트는 즉시 무자비한 징벌의 과녁으로, 타격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3.30, 중앙통신)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비망록(3.31)】 ‘韓美동맹은 상전과 주구사이의 주종동맹이며 미국의 침략 정책 실현을 위한 전쟁동맹’이라며 ‘민족의 수치이며 평화와 통일의 장애물인 韓美동맹은 지체없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3.31, 중앙통신)
- 【조선직업총동맹 대변인 담화(4.3)】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 등 노동계의 反정부 운동 관련 ‘괴뢰보수 패당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라며 ‘남조선 노동자들은 전민항전에 떨쳐 일어나 反인민적인 괴뢰보수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반정부 투쟁’ 선동(4.3,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주4·3사건’ 67주년을 맞아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을 그대로 두고서는 인민들이 언제 가도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남조선 인민들은 제주도봉기자들의 넋을 가슴에 새겨 안고 미국의 지배와 예속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4.3, 중앙통신·노동신문)
- 韓美 「합참」 의장 회담(3.27, 최윤희·덤프시) 및 연합 상륙훈련 실시에 대해 “북침전쟁공조 책동으로 북남관계는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핵전쟁발발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고 비난(4.4,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외무성 “사드는 선제공격용…전쟁억제력 키울 것”(3/26,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이 26일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은 남조선에 사드를 끌어들이함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선제타격 준비를 갖추는 것과 함께 저들의 세계지배 전략에 따라 전략적 경쟁자들인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외무성은 “남조선에 사드가 배치되는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될 것이며 조선반도가 또다시 대국들의 전쟁터로 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사드 미국 입장 ‘오락가락’…배치 위한 꼼수”(3/24, 노동신문)
 - 노동신문 24일 ‘군사적 패권을 틀어쥐기 위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사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혼탁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함.
 - 논평은 미국 군부와 외교당국자들이 사드 배치 계획에 대해 말을 뒤집으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나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갈피를 못 잡게 하고 나중에는 만성화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이 상상한 북미전쟁…“백악관에 화염이 타오른다”(3/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정론 ‘백두산 총대는 미제의 종말을 선언한다’에서 미국을 ‘지구 행성’에서 사라져야 할 ‘악성 종양’으로, 미국에 맞서는 북한을 세계 정의와 평화에 이바지하는 ‘정의 세력’으로 자칭하며 보도함.
 - 신문은 ‘서방의 한 유력신문’이 북미대결을 선과 악의 세기말 대결을 뜻하는 ‘아마겟돈급의 대진동’으로 표현했다면서 이는 “미국이 멸망하든 지구가 깨지든 결판이 나야 끝나는 조미(북미) 대결의 어마어마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평가함.

- 북한 “비핵화 흥정 용납못해…핵포기 꿈도 꾸지 말라”(3/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제재압박책동은 상상할 수 없는 과국적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원 글에서 현재 “북미간 적대관계가 해소불가능한 엄중한 상태에 있다”며 “제재와 대화가 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당과 군대가 내린 최종 결론”이라고 강조함.
 - 특히 논평원은 “몇몇이 공모결탁해 쑥덕공론을 벌이면서 우리의 핵을 빼앗아 보려고 흥정관을 벌여놓는 것 자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과 그에 아부굴종하며 체면도 저버린 자들은 우리의 핵포기에 대해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함.

- 북한 “일본 군사대국화…침략준비 완성단계”(3/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군사적 해외진출을 노린 위험한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 자위대 무력이 국방군으로 변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일본은 이미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 준비를 완성 단계에 옮긴 상태”라고 주장함.
 - 이어 “일본이 어느 때보다 군사대국화의 길로 미친 듯이 내달리고 있다”면서 “일본 당국이 자위대 지휘관리체계, 무력의 역할과 권능을 국방군 성격에 맞게 대폭 확대개편해나가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함.

- 북한, 조선총련 압수수색 연일 비난…“북일관계 악화”(3/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날강도적인 총련 탄압을 용서 못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총련 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난하며 “총련에 대한 박해는 조일(북일) 관계를 최악의 사태로 몰아가는 자멸행위”라고 주장함.
 - 논평은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타당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면서 “문제가 된 동포기업은 총련과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총련의 책임일꾼들은 그 존재조차 모른다”고 강조하며 특히 북한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조선총련에 대한 압수수색은 북일관계를 방해하기 위한 ‘불순세력의 정치적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일본 당국에 조선총련과 북한에 사죄할 것을 요구함.

- 북한 “핵·경제 병진노선은 진리…튼튼히 고수할 것”(3/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 채택을 ‘역사적 사변’으로 규정하며

“불패의 병진노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신문은 “지난 2년간은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입증된 격동적인 나날이었다”며 “병진노선이 안고 있는 진리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졌다”고 평가하며 “수많은 대기념비적 건축물들과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최첨단으로 질주하는 경제발전 성과들도 병진노선이 안아온 자랑찬 현실”이라고 강조함.

■ 북한, 유엔 인권결의 맞서 미국 ‘CIA 고문’ 비난(3/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인권옹호를 떠드는 자들의 추악한 정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 상원이 작년 공개한 ‘CIA 고문실태 보고서’를 언급하며 “미국의 만행은 명백한 특대형 인권유린범죄”라고 주장함.
- 논평은 미국이 고문행위를 허용하고 책임자들의 ‘죄악’을 두둔하고 있으며 영국 등 유럽국가들도 비밀감옥을 제공하며 미국의 ‘인권범죄’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미국의 고문 심문은 정신적·육체적 고문을 금지한 국제협약을 위반한 ‘인권 침해 행위’라며 “인권교살국 미국과 서방국들이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떠드는 것은 철면피성의 극치”라고 강조함.

■ 북한 “일본 역사왜곡은 배상 피하려는 꼼수”(4/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일본은 역사 앞에 정직하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 반동세력들이 침략과 범죄의 역사를 부정하는 다른 하나의 목적은 저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가적 배상을 회피하자는 데 있다”고 밝혔다.
- 신문은 “(일본은) 특히 우리 인민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별의별 오그랑수(속임수)를 다 써왔다”고 지적하며 “과거 청산은 일본에 있어서 더는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며 시대적 요구”라며 “일본 정객들은 우선 역사 앞에 정직해야 하며 인간 앞에 성실해야 한다”고 강조함.

다. 회담 관련

- 북한 유엔대표부 “비핵화 협상 없다…6자회담도 관심 없어”(4/1, 미국의소리)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함.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한 관리는 3월 31일 VOA에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비핵화는 더이상 협상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된 뒤에나 고려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음.

라. 대미국

- 북한, 천안함 5주기 맞아 음모론 불지피기 나서(3/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6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천안호는 그 어떤 어뢰 공격이나 폭발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군 잠수함의 의도적인 충돌에 의해 두 동강이 났다는 것이 세계 여론과 과학자들의 주장”이라고 주장함.
 - 보도는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제재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등이 착착 진행됐으며 “미국은 천안호 사건을 통해 남조선을 세계제패전략 실현의 주요 구성 부분으로 더욱 확고히 장악했다”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이 괴뢰패당을 사촉해 황당무계하고 허황하기 그지없는 ‘북 어뢰 공격설’을 날조한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특대형 범죄”라고 강조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북한, 조선총련 압수수색 일본과 대화 중단 시사(4/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북한이 “일본의 엄중한 정치적 도발과 국가주권침해행위”

와 관련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측에 통지문을 보냈으며 그 내용을 공개하며, 일본 정부의 조선총련 압수수색과 대북 인권 압박을 거론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조일(북일) 정부간 대화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 더하여 통지문은 “우리는 조일 스톡홀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일본이 납치 문제를 쌍방 사이에 해결하기로 한 합의를 어기고 유엔 인권무대에서 국제화하고 중심 문제로 부각시켜 놓음으로써 스스로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난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북한 외무성, 유엔 인권결의 비난…“초강경 대응”(3/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이 28일 대변인 담화에서 “유엔인권무대에서 벌어진 ‘결의’ 채택놀음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며 “광란적인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릴 확고한 의지를 명백히 천명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외무성은 “우리의 인권문제라는 것이 한갓 사기협잡품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날낫이 드러났다”며 결의안 채택이 “우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우리에게 대한 간섭과 침략의 구실을 만들어내려는 비열한 속내”라고 비난함.

자. 기타 국가

- “북한, 반동회의에 김영남 참석 서면 통보”(4/2, 자카르타 포스트)
 - 인도네시아 영문 일간지 자카르타 포스트는 2일 베냐민 카나디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협력국장의 말을 인용해 “오는 19일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북한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 美 오바마 대통령의 'NPT(핵확산금지조약) 더욱 강화' 등 성명(3.5, NPT 발효 45주년)에 대해 “비핵 국가들의 목을 NPT라는 올가미로 조여 저들이 마음 놓고 핵패권의 시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핵 세계 건설’ 배경(3.23,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고발장(3.24)】 천안함 폭침사건 5주년 즈음 ‘미국의 치밀한 정치군사적 이해타산으로부터 고안되고 실행된 모략극, 날조극’이라며 ‘대조선적대시정책 실현에 악용한 죄행을 민족과 세계 앞에 실토하고 사죄하여야 한다’고 주장(3.25, 중앙통신)
- 【조선해외동포원호위 성명(3.27)】 ‘日 경찰, ‘조총련’ 의장 등 자택 압수수색’ 관련 “법적 타당성도 갖추지 못한 불법 무도한 강패행위”라며 ‘총련을 과녁삼아 우리(北) 공화국의 자주권에 칼질을 한 이상 해당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3.27,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미국이 올해 들어 ‘對北 제재압박일변도(추가제재 대통령 행정명령 등) 정책추구 즉, 힘과 제재라는 두 수단으로 우리(北)를 압박하여 先 변화를 실현해 보려는 것’이라며 ‘병진노선 강화의 강력 대응’ 역설(3.28,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조일우호친선협회】 성명(3.28), 日 경찰의 「총련」 의장 등 자택 압수수색(*3.26, 북한산 송이버섯 불법 수입 연루 혐의)은 “우리(北)에 대한 도발이고 자주권침해 행위”로 “조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탄압 책동 중단’ 촉구(3.28,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대외문화연락협회 성명(3.30)】 ‘조총련’ 의장 자택 압수수색 관련 ‘공화국 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행위로,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정치탄압, 인권유린행위’라며 ‘공화국과 총련 앞에 사죄와 책임자 처벌’ 주장(3.30,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유럽나라들이 EU를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흉심도 가려보지 못하고 청맹과니 노릇만 하고 있다’며 ‘미국이 유럽동맹을 대러시아 제재에 끌어들인 것은 러시아와 함께 EU도 붕괴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주장(3.30, 중앙통신)
- 유럽 군수업체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우리軍에 ‘공격헬기’ 판매 계획에 대해 ‘미국의 대조선 침략정책에 편승한 전쟁범죄행위’라며 ‘유럽나라들은 헬기 판매 계획을 철회하는 등 실지 행동으로 평화보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3.31, 중앙통신 논평)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마이클 맥콜(美국회 하원 국토안전위원장) 발언(美, 北인터넷망 공격설)을 언급하며 ‘세계 최대의 사이버테러국인 미국이 국제사회 앞에서 공화국을 해킹한 당사자, 범죄자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은 다행하고도 솔직한 고백’이라고 주장(4.2, 중앙통신)
- 美 시민단체들의 군위안부 소년상 건립 요구 서명운동과 미국 내 소년상 추가 건립 계획 관련 ‘성노예 범죄를 부정하고 회피하려는 일본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며 ‘일본이 국제적 비난과 고립에서 벗어날 길은 과거범죄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강조(4.3,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김정은, 양어사료공장 시찰...“비린내 맡으니 기분좋아”(3/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새로 지어진 양어사료 생산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통신은 24일 김 제1비서가 군에서 건설한 ‘어분사료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밝혔으며 공장의 구체적인 건설 시점과 장소 등은 공개되지 않았음.
 - 김 제1비서가 양어장 먹이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지시해 건설된 이 공장은 부지면적 2만5천 m², 건축 면적 2천950여 m²에 연간 생산 능력은 2천여 t에 달한다고 통신이 설명함.

- 북한 김정은, 서해안 젓갈가공공장 건설장 시찰(3/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황해남도 서해안 금산포의 젓갈가공공장과 수산사업소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통신은 공장과 수산사업소가 김 제1비서의 직접 지시에 따라 은률군 능금도에 들어선다며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1천 t이며 사업소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함.

- 북한, 자체 생산 비행기 첫 공개...김정은 시험비행(4/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수기계공장인 ‘전동렬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 시찰 소식을 전하며 이 공장에서 생산한 경비행기는 물론 군용 비행기를 조립·생산하는 공장 내부 모습을 일부 공개함.
 - 신문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랜 역사를 가진 이 공장에서 군용 비행기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민간용 경비행기들도 마음먹은 대로 만들고 있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함.
 - 이날 김 제1위원장의 현지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오금철 부총참모장, 리병철 노동당 제1부부장, 조춘룡 제2경제(군수경제)위원장, 홍영칠 당 기계공업부(군수전담) 부부장 등이 수행함.

- 북한 해군사령관 리용주로 교체…김정은 시찰 영접(4/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164군부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하며 리용주를 해군사령관으로 호칭함.
 - 김 제1위원장은 4일 부대 내 함선종합훈련실에서 어뢰돌격훈련 등을 지켜보고 “지휘관들이 실전과 같은 정황 속에서 해상전투조직과 지휘능력, 함 운용술을 더 깊이 터득하도록 하는 데 품을 넣어야 한다”고 말함.
 - 그는 또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험항행을 지도한 고속수송정 6251호를 보고 “귀중한 혁명유산인 것만큼 보존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주문함.
 - 이어 군부대에서 올해 진행한 식수사업을 살펴보고 나무심기 운동을 통한 주둔 지역의 수림화·원림화를 촉구하고 ‘봄철영농전투’를 맞아 부대에서 농촌지원사업을 잘하라고 주문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체육부문 인사 교체 속속 확인…“장성택 지우기”(3/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평양에서 열린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소식을 전하며 보고자인 리일환 노동당 근로단체부장을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개함.
 - 신문은 25일 체육인대회 소식을 전하며 체육성 제1부상이 김일국에서 김정수로 교체된 사실도 확인했으며 그는 2012년 이후 조선축구협회 회장과 체육성 부상을 겸임하며 축구계의 핵심인물로 활약해왔다고 덧붙임.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수입병”은 적의 압살책동에 편승하는 것”(3/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국산화는 곧 사회주의 조국수호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국산화 노력없이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적들의 반공화국(북한) 압살정책에 편승하는 일”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미국 등 서방들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하는 것은 북한의 ‘자립경제 위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수입의존 경향을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꼽으며 특히 수입 의존 경향이 국산에 대한 불신, 외국산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져 결국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3월 22일 故 리동규(김일성상·김정일상 계관인이며 노력영웅, 김형직군의대학 명예학부장) 빈소에 화환 전달(3.23, 중앙방송)
- 김정일 저작(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 데 대하여. '00.3) 발표 15주년 관련 “혁명전통교양 강화는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 나가기 위한 필수적 요구, 반미대결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백승의 담보”라고 강조(3.23,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3월 25일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전달(3.26, 중앙방송)
-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3월 25일 평양체육관에서 리일환(黨 부장·국가체육지도총 부위원장·보고) 및 국가체육지도총 성원 등 참가한 가운데 ‘김정은 서한’ 전달(최룡해)·보고·토론·‘김정은에 전하는 맹세문’ 채택 등 진행(3.26,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적극 헌신한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 과학자 등에게 감사 전달(3.28, 중앙방송)
- 함경북도, 3월 30일 함룡철(道당위 비서, 기념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김정일 현지지도 40돌 기념보고회 진행(3.30, 중앙방송)
- 병진노선 채택 2주년('13.3.31, 3월 전원회의)을 맞아 ‘지난 2년간은 병진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입증된 격동적인 날이었다’며 ‘사회주의의 길로 계속 나가기 위해 불패의 병진노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3.31,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해군 제164군부대 시찰(4.4,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 4월 3일 김영남(제막사)·최룡해·현영철 등이 참가한 가운데 나선시에서 진행(4.4, 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김정은, 세계적 수준의 북한 명품 생산 독려(3/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정론에서 모든 생산부문이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북한 대동강맥주가 외국에서도 호평받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 뇌성으로 온 지구를 진감시킨 우리 세대가 과연 세계를 압도하는 조선의 인기상품을 내놓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함.
 - 이어 북한은 세계적인 제품의 생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이 세계적 수준을 압도할 때까지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시켜나가자”고 독려함.

다. 경제 상황

- “북한 토지 생산성 1961년 남한 수준에 그쳐”(3/25, 미국의소리)
 - 북한의 토지 생산성이 1990년 이후 계속 떨어져 2012년에는 남한의 1961년 수준에 그쳤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함.
 - 미국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최근 공개한 ‘2015년 세계식량정책 보고서’에서 북한의 토지 생산성은 지난 2012년 1ha당 1천450달러로 남한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음.
 - 북한의 토지 생산성은 1990년 1ha당 1천532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국가 중에서 1990년 이후 토지 생산성이 감소 추세에 있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함.

라. 대외 경제관계

- “북한, 남북 양식업 공동육성 사업에 긍정 입장”(3/27, 미국의소리)
 - 북한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추진하는 양식업 공동 육성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로하나 수바싱에 FAO 해양수산 담당관은 26일 “북한 정부와 양식업 공동육성 사업과 관련 아직 합의를 맺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FAO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동의했다”고 밝힘.

- 중국, “북한 AIB 가입 요청 거부…금융 수준 미달”(3/3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려 했으나 중국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영국 인터넷 매체를 인용해 31일 보도함.
 - 영국 인터넷 경제매체인 이머징마켓은 30일 중국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2월 특사를 보내 진리췌(金立群) AIIB 임시사무국 사무국장에게 AIIB 가입 의사를 전달했지만 가입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힘.

- WFP, 3월 북한 식량지원 규모 전달보다 39% 증가(4/3, 미국의소리)
 -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 3월 북한에 지원한 영양 및 식량 규모가 전달보다 39% 증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함.
 - WFP 실케 버 아시아지역 담당 대변인은 “지난달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75만7천여 명에게 1천651t의 영양강화 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힘.
 - 이어 실케 버 대변인은 “올해 1~2월 북한 당국의 주민 1명당 식량 배급량이 410g으로 작년과 비슷하다”며 “이는 성인 1명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최소 열량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함.

- 중국, 북한산 무연탄 ‘품질 미달’ 이유로 반송 잇따라(4/4, 제노망)
 - 4일 중국 산둥(山東) 지역 인터넷매체인 제노망(齊魯網)에 따르면 산둥성 룡커우(龍口)항 검역국은 지난달 하순 북한에서 수입된 무연탄을 검사한 결과 수은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해당 화물선으로 운반된 무연탄을 전량 반송조치함.

- 룡커우항 검역국 관계자는 “올해 강화된 검사 기준이 시행된 뒤 룡커우항에서 수입 무연탄이 품질 불합격 판정을 받아 반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힘.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북한 “산천 아름답게 만든다”…환경보호법 개정(3/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산천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통신은 24일 “시행규정은 ‘환경보호법’을 철저히 집행해 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인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며 그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해주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고 소개함.
 - 통신은 이에 따라 2011년 채택된 기존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은 효력을 잃었다고 설명하며 시행규정은 4개 장에 59개 조항으로 구성돼 60개 조항이었던 기존 규정보다 1개 조항이 줄었지만, 세부 조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음.

나. 시장 관련

- 북한, 장마당 이어 편의점과 온라인쇼핑몰도 인기(4/3, 연합뉴스)
 - 북한에서 ‘장마당’으로 대표되던 시장경제적 유통구조가 김정은 체제 들어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의 형태로 빠르게 확대·발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은 여기에 ‘국산품 소비’라는 원칙을 세우고 국가 경영방식을 통해 시장경제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치·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에서는 올해 초 최초의 온라인 쇼핑몰인 ‘옥류’ 영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말 시험운영을 마친 옥류는 인민봉사총국이 북한 내부망을 통해 운영하는 국영

쇼핑몰이지만 음식, 약품, 가방, 화장품 등 일상 생활용품부터 유명 식당의 음식까지 ‘없는 게 없는’ 수준이라고 뉴스는 전함.

- 또한 국영기업 ‘황금벌무역회사’가 운영하는 지난해 말 평양에 1호점을 개업한 북한 최초의 편의점 ‘황금벌상점’은 급속한 매출 신장에 힘입어 올해 안으로 평양 20호점 개업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상점은 국산 식료품과 일용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며, 역시 저렴한 가격이라고 뉴스는 덧붙임.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북한 “남한 탈북자들 삶 비참”…재입북 권유(4/2,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가 2일 ‘차례진 것은 천대와 멸시, 막심한 후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 탈북자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다며 “공화국(북한)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열망이 높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우리민족끼리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중 대다수가 낮은 소득과 사회적 편견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견디다 못해 결국 ‘범죄의 길’로 빠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비록 죄를 지은 자식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선전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서도 7080가수 공연 인기…김정은의 ‘추억정치’(3/24, 노동신문)
 - 평양 인민극장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이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 ‘추억의 노래’가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이 24일 전함.
 - 신문은 이번 공연이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직접 지시로 당·정·군 고위간부들을

비롯해 평양시민들의 절찬 속에 진행됐다며 공연 장면을 크게 소개함.

- 공연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가 된 후 처음으로 직접 만들어 관장했던 만수대예술단의 남성4중창단 리더 주창혁, 여성기악중주, 여성중창단 등 초대 멤버들이 백발을 날리며 화려했던 과거의 공연 무대를 다시 선보였음.

■ 북한, 전국체육인대회 준비 총력…“체육강국 세우자”(3/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1~3면을 체육특집으로 꾸미고 “온 나라를 들끓게 하는 체육 열풍을 계속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한다”면서 체육인들에게 체육역사를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체육신화로 더욱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함.
- 이어 지난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등 활약을 보인 여자축구를 언급하며 “조국과 인민에게 승리의 금메달을 가져다주는 체육선수들이야말로 평화 시기의 육탄영웅들이고 제일가는 애국자”라고 강조함.
- 신문은 아울러 각 기관의 간부들에게는 체육의 과학화를 통해 “세계적인 것으로 되는 과학기술성과들을 팡팡 내놓아야 한다”면서 “체육부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이고 국가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라”고 강조함.

■ 북한, 제빵사 프랑스 연수 실시…“소비자 입맛 맞춰”(3/2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5일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제품을 소개하며 “하루빨리 세계에 도전할 경쟁력을 갖기 위해 생산자 대중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어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기능공들에 대해 프랑스 연수를 실시해 각종 빵제품 만드는 법을 배워오도록 했다면서 “(그 결과) 최근 프랑스식 호밀빵을 내놓았는데 고소한 맛이 좋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함.

■ 북한 전역,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심각(3/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강원도 통천·고성군, 양강도 삼수·갑산·풍서·김형직군, 함경북도 어랑군에서 2월 하순부터 3월 현재까지의 강수량이 2mm 미만으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적었다”고 밝혔음.
- 이어 “강원도 금강·창도·회양군, 양강도 김형권군, 함경남도 함흥시·홍원군, 평안남도 대동군, 자강도 초산군, 함경북도 명천·무산군에서도 강수량이 평년의 11~35% 수준인 3~6mm에 그쳐 가뭄이 심한 상태”라고 소개함.

- 유니세프 “북한 홍역 발생 보도는 사실무근”(4/1, 미국의소리)
 - 북한에서 최근 홍역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을 인용해 1일 보도함.
 - 크리스토퍼 드 보노 유니세프 아시아사무소 대변인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북한 당국으로부터 북한 내 홍역 발생 보고가 없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북한에서 홍역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검역을 강화했다는 지난달 25일 러시아의소리 방송 보도를 부인한 것임.

- 북한 학교들 일제히 개학·전국에 새 교과서 공급(4/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개학식이 1일 일제히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며 전국 학생들에게 새 교과서가 공급됐고, 소학교(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새 교복과 학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이 조직됐다고 전함.

- 북한 젊은이들도 ‘동지나 동무’란 표현 안쓴다(2/27, 문화어학습 4/5,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5일 입수한 북한 계간지 ‘문화어학습’ 최신호(2월 27일 발행)는 ‘언어생활에서의 문화성과 언어예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젊은이들이 ‘동지’와 ‘동무’라는 표현을 생략하는 경향을 알립.
 - 논문은 “지금 일부 사람들과 청소년들은 ‘동지’, ‘동무’라는 말은 회의나 공식적인 장소에서만 쓰고 여느 때는 ‘야, 자’ 하면서 거친 말을 하거나 심지어 윗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반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 문화어학습은 ‘학생들이 지켜야 할 언어예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도 “서로 돕고 이끌며 한 형제처럼 생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서로 이름이나 사회적 직무의 뒤에 ‘동무’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 좋다”고 강조함.
 - 논문은 “친한 동무들 사이에 ‘동무’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일심단결된 우리 사회에서 낯은 관점과 태도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임.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일본, 6자회담 참가국에 북핵 비공식 논의 제안”(3/29,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6자 회담 참가국에 북핵 문제에 관한 비공식 협의를 타진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상반기 도쿄(東京) 개최를 추진 중인 국제 학술 행사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때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정부 대표가 모여 북한 핵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의함.
 - 그러나 일본 정부의 제안에 관해 북한은 회답하지 않았고 미국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지켜 본 뒤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이란,북한 통한 ‘아웃소싱’ 핵개발 제대로 감시해야”(3/31, 연합뉴스)
 -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정작 북한을 통한 이란의 ‘아웃소싱’ 핵 개발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음.
 - 중국과 북한 등 동북아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데일리비스트 기고문에서 “미국과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은 이란 내부에 대한 공격적 사찰에 달려 있으나 이란은 국경 밖에 비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창 변호사는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 핵시설을 사찰하는 동안 이란은 다른 곳에서 바쁘게 핵폭탄을 조립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핵협상이 타결되면 이란이 핵 개발에 착수하더라도 국제사회는 1년의 시한을 확보할 수 있다지만 평양과 테헤란과의 비행시간을 감안할 때 이란은 하루면 거뜬히 핵폭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언급함.

- 북한 유엔대표부 “비핵화 협상 없다…6자회담도 관심 없어”(4/1, 연합뉴스)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

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한 관리는 전날 이 방송에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비핵화는 더이상 협상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된 뒤이나 고려해볼 문제”라고 덧붙이며, 6자회담 재개 요청을 받는다고 해도 북한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담이 재개될 경우 어떤 조건을 주고받을 것인지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재 평양 분위기”라고 전함.

■ 미국 전문가들 “북한, 이란과 달라 핵포기 안할 것”(4/2, 연합뉴스)

- 이란 핵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은 이란과 달라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조지 퍼코비치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기업 연구소(AEI)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북한은 앞으로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란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용도나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용도로 핵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점이 북한과는 매우 다르다고 설명함.
- 한편,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북한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 의도가 전혀 없다”며 북한이 지난 20여년 동안 핵 협상으로 경제적 이익만 챙기는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함. 또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남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통합”이라고 덧붙임.

■ 미-러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재개 방안 등 논의(4/2, 연합뉴스)

- 러시아와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힘.
-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언론 보도문을 통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과 회담했다고 전했다.
- 외무부는 “회담에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 실질적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 “러시아 측은 특히 동북아 지역의 정치·군사적

긴장 해소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효과적 평화·안보 체제가 구축돼 가는 과정에서 (6자회담 재개의) 전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 이란 핵협상 타결…마지막 남은 북한에 시선집중(4/3, 연합뉴스)

-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2일(현지시간) 이란의 핵개발 중단 및 대(對)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 6월 말까지 최종 타결기로 하면서 장기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핵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두 사안 모두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 유지와 직결돼 있는데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두 협상의 공통분모로 참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이란 핵협상이 북한 핵협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일단 미 정가에선 북한 핵협상 전망과 관련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현실적으로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큰 상황임. 1994년 북한과의 핵협상 끝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최근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데 온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새로운 핵협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음.
- 더욱이 미 정치권이 앞으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빨려들 경우 북한 등 외교적 현안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다 북한 역시 임기가 끝나가는 현 정부보다는 차기 정권과의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북핵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는 한 요인으로 보고 있음.

■ 내달 일본서 동북아협력대화…북핵 ‘탐색적 대화’ 추진(4/5, 연합뉴스)

- 이른바 ‘미니 6자 회담’으로도 불리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5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산하의 ‘국제 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는 5월 일본에서 NEACD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만약 이번 대화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면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1993년 출범한 NEACD는 IGCC가 반관반민(트랙 1.5) 성격의 다자간 안보 대화체로 북한을 포함한 북핵 6자 회담국의 정부 관료와 학자 등이 참석함. NEACD

가 기본적으로 동북아 지역 안보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는 학술적인 성격의 비공식적 포럼이지만, 2002년부터 북한이 포럼에 참여한 이후 각국에서 주로 6자회담 차석대표(국장급)가 참석한다는 점에서 ‘미니 6자 회담’으로 불리면서 주목을 받았음.

나. 미·북 관계

- 북한 “미국, 러시아 제재로 EU와 공동붕괴 노려”(3/30, 연합뉴스)
 - 북한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실제로는 러시아와 유럽연합(EU)의 공동 붕괴를 노리는 미국의 ‘흉심’ 때문이라고 주장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흉심도 못 가려보는 청맹과니(사려분별이 없는 사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EU를 대러시아 제재에 끌어들이는 것은 러시아와 함께 EU까지도 붕괴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 조선중앙통신은 EU가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미국을 추종해 여러 차례 러시아에 경제, 금융 분야에 제재를 가했는데, 이러한 ‘제재 소동’에 나섰던 유럽 나라들이 역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어 “미국은 유럽 나라들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희생시켜 저들의 쇠퇴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려 하고 있다”며 “유럽 나라들이 EU를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흉심도 가려 못 보고 청맹과니 노릇만 하고 있다”고 비난함.
-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 “오바마, 북한과 새로운 핵협상 어려울 것”(4/1, 연합뉴스)
 - 지난 1994년 북한과의 핵협상 끝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3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핵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새로운 핵협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 갈루치 전 특사는 이날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운영자 조엘 위트)’ 주최로 열린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란 핵협상이 타결돼 합의안이 마련되면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데 온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 갈루치 전 특사는 특히 “이란 핵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결국 같은 고위관료들”이라며 “2011년 작고한 워런 크리스토퍼 전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미국의 국가안보 관료들은 한 번에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란과의 핵 합의를 방어하는 일과 북한과 새로운 핵협상에 나서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어려우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언급함.

■ 성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방러…북한 문제 협의(4/1,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가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31일(현지시간) 밝힘.
- 국무부는 김 특별대표가 이날 모스크바로 떠나 다음날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 등 고위 관료들과 만나 북핵·북한 문제를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주한 미국대사를 지내고 지난해 11월 현직에 임명된 이후 김 특별대표가 러시아를 방문하거나 러시아 측 수석대표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이버 공격 제재 행정명령…북한 소니 해킹 비판(4/2,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갈수록 늘어나는 사이버 공격을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국가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해커 및 해킹 연루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강력 대처 방침을 천명함.
- 그는 특히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백악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사이버 위협의 상당 부분은 외국(국가나 개인)으로부터 자행되는 것”이라면서 “이란이 미국의 은행을 해킹 대상으로 삼았고 북한은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해킹해 자료를 파괴하고 수천 대의 컴퓨터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 재무부에 국내외 해커는 물론 해킹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외국의 국가나 개인,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 재무부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미국 기업 등을 공격한 해커나 해킹 연루자 및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음.

- 북한 “미국은 사이버 테러국…핵정보 위해 정탐”(4/2, 연합뉴스)
 - 북한은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이 최근 미국의 작년 말 대북 사이버 공격을 시인한 듯 한 발언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을 ‘사이버 테러국가’로 몰아붙였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매콜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세계 최대의 사이버 테러국인 미국이 국제사회 앞에서 우리 공화국의 컴퓨터망에 해킹을 한 당사자, 범죄자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고 주장함.
 - 매콜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토론회에서 “(작년 말) 북한의 웹이 다운된 것은 소니픽처스 컴퓨터망을 교란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음. 이에 중앙통신은 “미국은 수년 전부터 우리의 컴퓨터망에 침입해 핵개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보려고 온갖 비열한 정탐행위들을 감행해왔다”고 비난했음.

다. 중·북 관계

- 주북한 중국대사 공식활동…‘16지방침’ 한반도 평화 강조(3/25, 연합뉴스)
 - 리진권(李進軍·59) 신임 주북 중국대사가 북한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에 부임,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사관 측은 최근 리 대사의 인사말을 올려 그가 류홍차이(劉洪才) 전 대사의 후임으로 공식 부임했음을 밝힘.
 - 리 대사는 인사말에서 “신임 주북 대사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전체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중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 리 대사가 이런 포부를 밝힌 것은 그가 앞으로 북중 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개발 저지 임무를 부여받았을 것이란 중국 전문가의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됨.
- 미국 의회 자문기구 “북중 고위급 교류 전무”(3/25, 연합뉴스)
 -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지난 2010년 이후 북한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 교류가 급감했으며 공산당 당 대 당 교류는 거의 끊긴 상태라고 진단함.

- UCESRC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중간 고위급 인사 교류가 10여 차례에 그쳐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밝히고 이는 두 나라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의 권력 교체기인 2011~2012년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고위급 인사 교류 감소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2013년 이후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진 데는 '의식적인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함. 특히 보고서는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의 고위급 인사 교류가 2009~2012년 해마다 4~5 차례에 달했으나 2013년과 작년에는 한 차례도 없었던 점에 주목했으며, 그동안 북한과 중국의 당 대 당 교류가 정부 대 정부 교류보다 비공식적이고 우호적 성격을 띠며 양국관계의 근간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함.
- 中 단둥 기업들, 북한에 소액물품무관세 시장 개설 제안(3/30, 연합뉴스)
 - 중국의 최대 국경도시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기업들이 북한 당국에 소액 물품을 무관세로 교역할 수 있는 호시(互市)무역시장 개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음.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단둥시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 조선 국제전람사 박용식 사장 일행은 지난 26일 단둥을 방문, CCPIT 관계자 및 현지 경제인들과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 자리에 단둥 기업가 대표로 참가한 천취안통(陳全統) 귀먼완(國門灣) 과학기술 오금성 회장은 '국경호시무역구'를 개설해 양국간 소액 물품 교역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자는 제안을 했음. 한편, 압록강 하구에 있는 인구 250만명의 단둥은 철도와 도로를 통해 강 건너 북한 신의주로 반출입되는 화물량이 북중 교역총량의 70~80%에 달하는 양국 간 최대 교역 거점임.
- “중국, 북한 AIB 가입 요청 거부…금융 수준 미달”(3/31,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려 했으나 중국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영국 인터넷 매체를 인용해 보도함.
 - 영국 인터넷 경제매체인 이머징마켓은 30일 중국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2월 특사를 보내 진리퀸(金立群) AIIB 임시사무국 사무국장에게 AIIB 가입 의사를 전달했지만 가입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금융·경제체제가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준에 미치지 못해 가입이 거부됐으며 북한은 이 같은 중국의 ‘단호한 거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 이와 관련,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AIIB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표명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가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음.

■ 북한 ‘새 중국대사 부임’ 한줄 보도…관계 냉랭 여전(3/31, 연합뉴스)

- 장성택 숙청 이후 중국과 냉랭한 관계를 이어온 북한이 평양 주재 중국대사가 교체된 사실을 단 한 줄로 짤막하게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리진권(李進軍) 북한 주재 중국 특명전권대사가 3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을 봉정했다”고 전함.
- 북한은 대부분 새로 부임한 외국 대사의 신임장 제출 소식을 전할 때 김 상임위원장과 담화를 나눴다고 덧붙였지만 이날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단 한 줄짜리 보도에 그쳤음. 이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그해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소원해진 북중 관계가 여전히 복원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됨.

라. 일·북 관계

■ 일본경찰, 조선총련 의장 자택 압수수색(3/26, 연합뉴스)

- 교토부(京都)부 경찰과 가나가와(神奈川)현 경찰 등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도쿄 도내의 식품 도매 회사가 북한에서 송이버섯을 불법 수입한 사건과 관련해 도쿄 도내의 허종만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조선총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수사 대상인 식품 도매업체 ‘도호(東方)’는 지난 2010년 9월 북한산 송이버섯 약 1천 200kg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수입한 혐의(외환법 위반)를 받고 있음. 일본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대북 제재 차원에서 2006년부터 북한과의 수출입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음.
- 경찰은 이 회사 사장 리 모(61)씨와 종업원 2명을 체포하는 한편, 이 회사가

조선총련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허 의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음. 이번 건은 개별 범죄 혐의에 대한 경찰의 법 집행 조치이지만, 일본 정부 수뇌부와 의 교감 아래 이뤄지는 대북 압박의 일환일 가능성이 주목되는 바임.

■ 북한 “일본 군사대국화…침략준비 완성단계”(3/30, 연합뉴스)

- 북한은 일본이 자위대를 국방군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위협천만한 군사대국화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고 비판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군사적 해외진출을 노린 위험한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 자위대 무력이 국방군으로 변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일본은 이미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 준비를 완성 단계에 옮긴 상태”라고 주장하며 “일본 당국이 자위대 지휘관리체계, 무력의 역할과 권능을 국방군 성격에 맞게 대폭 확대 개편해나가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함.
- 신문은 해외 일본인의 육상 이송을 허용한 자위대법 개정, 사이버방위대 발족, 우주부대 창설 추진 등을 거론하며 “적극적 평화주의의 간판 밑에 자위대의 해외 진출을 영원한 기본임무로 고착시켜 침략 무력으로 만들려 한다”고 지적하였음.

■ 북한, 일본 경찰 조선총련 압수수색 거둬 비난(3/30, 연합뉴스)

- 북한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는 일본 경찰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 자택 압수수색을 ‘공화국 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행위’라고 비난함.
-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경찰이 지난 26일 허종만 조선총련 의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재일본조선인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 탄압, 인권유린 행위이며 시대착오적인 대결 책동”이라고 주장함. 또한 성명은 일본 경찰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조선총련을 불법행위와 연관짓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의식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어 “일본 당국은 이번 파쇼적 폭거에 대해 공화국(북한)과 총련 앞에 사죄하고 책임있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일본 경찰은 지난 26일 북한산 송이를 중국산으로 위장해 불법 수입한 사건과 관련해 허종만 조선총련 의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 일본, 대북 독자 제재조치 연장 정식 결정(3/31,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2년 연장기로 정식 결정함.
 - 연장 대상은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만경봉호 등 인도 목적을 제외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 전세 항공기 일본 왕래 금지 등으로, 작년 7월 북한이 일본인 납북 피해자들을 재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재일본조선인 총연합회(재일총련) 간부 등의 인적 왕래와 대북 송금 등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하였음.
 - 하지만 북한이 지난 2일에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아직도 납북자 재조사 결과를 일본 측에 통보해주지 않자 현재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계속 유지기로 함.

- “北, 납치피해자 뺀 일본인 조사결과 통보 타진”(4/1, 연합뉴스)
 - 작년부터 자국내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온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관련 정보를 뺀 1차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타진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하였음.
 - 북한은 올들어 열린 북일간 물밑 협상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재일 조선인의 일본인 아내와 북한 내 일본인 유골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첫 통보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그러나 북한이 첫 통보에 납치 피해자 안부 정보는 포함하지 않을 생각인 것으로 판명되자 일본 측은 ‘납치 문제가 최우선’이라며 통보받기를 거부했다고 산케이는 소개했음.
 -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2월 28일부터 이틀간 중국 다롄(大連)에서 북일 양측 당국자가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함. 북한은 지난해 7월 4일 자국 내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 조사기관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날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중 송금 및 인적 왕래 관련 제재 등을 일부 해제했으나, 약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의 첫 조사결과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음.

- 일본정부, 북한의 북일 협의 중단 거론에 반발(4/2, 연합뉴스)
 - 북한이 2일 일본과의 대화를 중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하였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일본 측은 작년

5월 북일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번 발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그는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으로부터 베이징(北京)의 외교 경로로 연락이 있었다”며 “북일 합의에 바탕을 두고 신속·정직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음.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로 북한에 항의의 뜻을 전하고 납치 문제 재조사를 계속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압수수색과 일본 정부의 대북 인권압박 등을 거론하고서 “이런 상태에서는 조일(북일) 정부 간 대화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관한 북일 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음.

■ 북한, 조선총련 압수수색 일본과 대화 중단 시사(4/2, 연합뉴스)

- 북한은 2일 일본 정부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압수수색 등에 항의하며 현재 진행 중인 북일 대화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이 “일본의 엄중한 정치적 도발과 국가주권침해행위”와 관련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측에 통지문을 보냈다고 그 내용을 공개했음. 통지문은 일본 정부의 조선총련 압수수색과 대북 인권 압박을 거론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조일(북일) 정부간 대화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힘.
- 북한과 일본의 작년 5월 말 스톡홀름 합의로 본격화된 북일 대화가 채 1년도 안돼 양국 관계 악화로 중단 위기에 처한 셈임. 앞서 북한은 지난달 말 조일우호 친선협회를 비롯한 단체들을 내세워 조선총련 압수수색이 북일관계를 ‘과국’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북한, 일본 연일 비난…“성노예 범죄 청산하라”(4/3, 연합뉴스)

- 북한은 일본의 군위안부 책임 회피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며 일본에 과거사 청산을 촉구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제적 비난과 고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역사 청산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일본이 국제 고립에서 벗어날 길은 과거 범죄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밝힘.
- 논평은 미국 글렌데일 시에 설치된 군위안부 소녀상과 미국 내 소녀상 추가

건립 계획 등을 언급하며 이는 “성노예 범죄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국제사회의 강렬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음.

마. 러·북 관계

- 북한 부총리 곧 방러…“김정은 방러 준비 차원일수도”(4/3, 연합뉴스)
 - 북한 부총리가 러시아와의 친선의 해 행사 참석차 이달 중 모스크바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 의회 신문 ‘파를라멘트스카야 가제타’는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와 예브게니 부슈민 러시아 상원 부의장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전하였음.
 - 신문은 올해는 러시아와 북한 간 상호 친선의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북한 부총리가 이달 중순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김 대사와 부슈민 부의장의 면담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함. 그러나 7명의 북한 부총리들 가운데 누가 러시아를 찾을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 다른 모스크바 주재 외교 소식통도 “북한 부총리가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의 방문이 오는 5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러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 기타

- 북한, 유엔 인권결의 맞서 미국 ‘CIA 고문’ 비난(3/31, 연합뉴스)
 - 북한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고문 심문’은 인권유린 행위라며 미국 등 서방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인권옹호를 떠드는 자들의 추악한 정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 상원이 작년 공개한 ‘CIA 고문실태 보고서’를 언급하며 “미국의 만행은 명백한 특대형 인권유린범죄”라고 주장함.
 - 논평은 미국이 고문행위를 허용하고 책임자들의 ‘죄악’을 두둔하고 있으며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비밀감옥을 제공하며 미국의 ‘인권범죄’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어 미국의 고문 심문은 정신적·육체적 고문을 금지한 국제협약을

위반한 ‘인권 침해 행위’라며 “인권교살국 미국과 서방국들이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떠드는 것은 철면피성의 극치”라고 강조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국 “예견된 사안” 무덤덤…한미관계 영향 없을 듯(3/27, 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26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미국 워싱턴 당국은 당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
 - 이미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호주 등 유럽과 태평양의 주요 동맹국 및 우방이 가입을 선언한 상황이어서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정통한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임.
 - 특히 우리 정부는 사전에 외교채널을 통해 AIIB 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정부로서도 ‘예견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들도 한국의 AIIB 가입을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美국방장관 내달 9~11일 방한…사드 논의할지 주목(3/31,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 달 9~11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한미군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논의할지 주목되고 있음.
 - 미국 정부내 ‘MD(미사일방어)체계 강경론자’로 알려진 카터 장관의 방한기간 한미 양국에서 이미 공론화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 김 대변인은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은 취임 이후 처음 (한국과 일본 등) 우방을 방문하는 일정에 따라 (인사차) 오는 것”이라며 “사드 문제는 아직도 미국 정부에서 주한미군 배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의제에는 없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 국방장관이 접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 국방현안을 넘어 한미중 3국 간 대형 안보이슈로 부상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음.

- 미 전문가 “한미원자력 협력 협정, 한국에 다양한 혜택”(3/31, 연합뉴스)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 새로 체결 되면 한국이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과 연구, 원자력 발전소 수출 등에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함.
 -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인 스나이더는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연료 재처리를 못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협정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는 한국이 얻게 되는 다양한 혜택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하였음.
 - 스나이더는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에만 한정해 협정을 분석하면 양국에 미치는 광범위한 혜택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새로운 협정이 안정적인 연료 공급, 원자력 폐기물 관리, 원자력 발전소 수출 등 한국정부의 목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원자력 안전분야에서 가장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차대통령 “위안부문제 시급”…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인권차원 공감”(4/2,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미하원 대표단을 만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90세에 가까운 고령임을 감안할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음. 또한, 박 대통령은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힘.
 - 펠로시 원내대표는 여성 인권의 차원에서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한중 일 3국 외교장관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다”고 밝힌 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 박 대통령이 이날 펠로시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은 오는 29일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앞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정치지도자들을 향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서 성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됨.

- 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아베총리, 사과 희망…장소가 美의회일 필요없어”(4/2, 연합뉴스)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29일)과 관련, “아베 총리가 어떤 형식으로든 사과하길 희망한다”면서도 “그것(사과 장소)이 (미국) 의회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음.
 - 미국 하원 대표단 자격으로 방한한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에게 연설 기회를 주는 것이 일본에 역사의 짐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음.
 - 미국 하원에서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될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펠로시 원내대표는 “우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아베 총리가 그것을 연설에서 말할지 말지는 내가 말할 것이 아니다”고 밝힘.

- 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차대통령 방미때 평화통일결의안 채택 기대”(4/2, 연합뉴스)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방미때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에게 종전 70주년 기념 ‘동북아 100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 공동 채택을 제안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번 미국을 방문할 때 서명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날 정오께 미 하원의원단과 함께 국회를 찾아 정의장 및 여야 의원들과 오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음. 또 펠로시 원내대표는 본인이 미 하원의장이던 2007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일본군 강제동원 성노예 규탄 결의안’을 언급, “내가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통과시킨 중요한 결의안 중 하나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결의안이었다”고 평가했음.
 - 그러면서 “H.R. 121(하원 결의 121호)이 특히 의미가 깊고 강력한 결의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계 미국인인 마이크 혼다 의원과 도리스 마츠이 의원 두 분이 주도적으로 발의하셨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이며, 또 “통일과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함.

- 한반도 ‘사드’ 논란 격화…북한·북핵 공조 영향 우려(4/2, 연합뉴스)
 -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 주변국 간의 반응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북한·북핵 문제 대응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북한 및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드 논란으로 촉발되는 이들 국가와의 간극이 자칫 대북공조에 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임.
 - 한미 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 ‘3NO(요청·협치·결정이 없다)’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에서 기회만 있으면 배치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 사드를 개발한 미국의 록히드마틴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사드 시스템을 사들일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일 “관련 정보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파장이 예상되고 있음.

나. 한·중 관계

- AIB 한국 지분 얼마나 될까(3/26,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이 AIB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최대 쟁점은 한국이 얼마만큼의 지분을 확보하느냐로 옮겨가게 되었음.
 -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AIB에서의 한국 발언권이 좌우되기 때문임. 정부 관계자는 “모든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의 핵심은 지분을 분산에 달려 있다”며 “AIB 설립 과정에서 한국의 지분율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음.
 - AIB에 참여하는 국가별 지분은 앞으로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력에 비례해 결정한다는 원칙이 세워진 상태로, AIB와 관련한 투표권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가 75%, 지역 외 국가가 25%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음. 한편, 아시아에서 한국의 경제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한국이 적지 않은 지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중국 재정부 “한국의 AIB 가입신청 환영”(3/27, 연합뉴스)
 - 중국 재정부 국제재정금융협력국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을 통해

- “한국이 26일 AIIB 예정창립 회원국 가입을 신청한다고 선언하고 중국에 서면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중국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
- 또 “중국은 AIIB 예정창립 회원국 수석협상대표회의 의장으로서 다자 프로세스에 따라 (한국의 가입신청에 대해) 기존 예정창립 회원국들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한국은 4월11일 정식으로 예정창립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사설에서 한국이 비록 다른 주요 유럽국가들에 비해 다소 늦게 가입을 결정했지만 이 때문에 결정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이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고 미국은 동맹이라는 점 때문에 AIIB 가입을 놓고 고민을 거듭해왔다면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결국 평형상태를 통제하고 본국 이익에 들어맞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라고 덧붙임.
- 한미중 외교전선 ‘사드’로 단일화…갈등 본격화되나(3/27, 연합뉴스)
-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놓고 복잡하게 전개됐던 한미중 3국의 외교적 대립 전선이 우리의 AIIB 참여결정으로 사드로 단일화된 바, 이에 따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외교적 대립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미중 양국의 입장이 대립했던 사드와 AIIB 문제 중 AIIB에 대해 우리가 중국의 손을 들어준 만큼 안보적 이익이 걸린 사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이미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해 “주변국이 우리 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임. 이런 측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3 NO(요청·협의를 결정이 없다)’이지만, 내부 분위기를 볼 때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간 암묵적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김장수 신임 주중국 대사, “중사드 반대이유 몰라…정부내 누구도 설명못해”(3/30, 연합뉴스)
- 김장수 신임 주중국 대사는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 “아직은 저도 모르고 한국 정부 내에서도 누구도 그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함.

-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김 신임 대사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아직 (미국이) 사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기술적인 기여를 제공했다든지, 기술 교범 및 운용의 특성을 제공했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다”면서 “이런 것이 있어야 이 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중국이 싫어하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 그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시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언론상으로 보면 (반대 이유가) X밴드 레이더가 요격용이나 감시용이나 하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해서, 없는 실상을 갖고 (어떻게) 설득하겠느냐고 묻는 것은 답변하기 어렵다. 결정이 날 때에 제 논리대로 얘기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다. 한·일 관계

- 조선통신사 이에 동상 제막식 참석...“한일관계 발전은 큰사명”(3/25, 연합뉴스)
 - 조선 전기에 대일본 외교에서 활약한 충숙공 이에(李藝·1373~1445) 선생의 동상이 국립외교원에 건립됨. 외교부는 25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정갑윤 국회 부의장, 김기현 울산 광역시장, 벳쇼고로(別所浩郎) 주한 일본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에 선생 동상 제막식을 했음.
 - 제막식에서 윤 장관은 “지난 주말 서울에서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됐다”면서 “역내 긴장으로 지난 3년간 단절된 3국간 협력체제가 의장국인 우리 주도로 복원됐고 이를 통해 3국간 협력뿐만 아니라 양국간 관계증진을 위한 중요 전기를 마련했다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함. 또한, 이에 선생의 출신지인 울산이 한국의 ‘산업수도’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이룬 경제기적은 남의 지원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땀과 눈물, 그리고 희생의 바탕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강조함.
 - 한편, 조선통신사로 활약한 이에 선생은 조선 초 한일 관계의 근간이 된 계해약조(癸亥約條) 체결에 공헌했으며, 일본에 40여 차례 파견돼 피랍 조선인 귀환을 성사시켰음.

- 아베 일본 총리, 자위대를 ‘우리군’으로 표현해 논란(3/25,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위대(自衛隊)를 ‘우리 군(軍)’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음. 아베 총리는 이달 2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함께 훈련하는 국가들과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중략) 함께 훈련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성과를 낸다”고 언급함.
 - 이 발언은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戰力)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와 배치되며, 일본은 자위대를 군대와 구별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자국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지닌 조직으로 규정했는데 이를 무시한 발언임.
 - 이와 관련, 교도통신에 따르면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민주당 정치회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논의를 뒤엎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며 “새로운 안전보장법제의 골격이 여당에서 합의돼 앞으로 기우뚱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감을 표명했으며, 마쓰노 요리히사(松野頼久) 유신당 간사장은 “불안을 부추기는 표현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고 전했다.

- 아베 일본총리, “위안부 인신매매 가슴 아파…고노담화 재검증 인해”(3/27,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희생을 당하고 측량할 수 없는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이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다”라고 밝힘.
 - 다음 달 29일(이하 현지시간)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에서 합동 연설을 하는 아베 총리는 이날자로 발매된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힘.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WP는 아베의 한 측근을 인용해 보도함.
 - 그는 또 “아베 내각은 1995년 2차대전 종전 50주년 때의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2005년 종전 60주년 때의 고이즈미(小泉) 담화 등 전임 내각의 역사인식을 전체로서 계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하며, 이어 “아베 내각은 1993년 일본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한 고노(河野)담화를 재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 아베 일본총리, “정상회담 할지 말지를 협상카드로 쓰면 안돼”(3/27,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만나다거나 만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협상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아베 총리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 후지타 유키히사(藤田幸久) 의원으로부터 질문받자 이같이 답한 뒤 “이것이 기본적인 나의 협상 자세”라고 덧붙이며, “만나다 안 만난다는 것을 협상의 재료로 사용하면 만나기 전 단계에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쪽이 양보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아베 총리는 이 같은 답변에 앞서 “한국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운을 뗐지만 질문이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풀이되며, 또 군위 안부 문제의 진전 등 정상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됨.

■ 일본인 55% “아베담화에 식민지·침략 반성·사죄 넣어야”(3/29, 연합뉴스)

- 일본인 과반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여름에 발표할 전후(戰後) 70주년 담화(아베 담화)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인 것으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 교도통신이 28~29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담화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넣어야 한다는 응답이 54.6%, 넣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30.5%로 각각 나타남.
- 도쿄에 본사를 둔 일본 언론사들이 울들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담화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담아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30%와 50%사이에서 변동이 있었으며, 이는 식민지 지배 등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보다는 항상 많았음.

■ 아베 일본총리, “위안부는 인신매매 희생자” 표현 쓴 건 사실”(3/30,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최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자신이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썼다고 밝힘.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희생”이라고 인터뷰에서 표현한 데 대해 “인신매매에 대한 논의도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표현을 썼다”고 말함.

-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지난 27일자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표현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이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다”라고 밝힘.
- 아베 총리, “박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성사 기대 전달”(3/30,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리관유(李光耀) 싱가포르 초대총리 국장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29일 단시간 대화를 나누었다고 국회에서 밝힘.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30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지난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박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개최됐으며 앞으로 한중일 회의가 정상 차원으로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박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설명하였음.
 - 한편,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해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임.
- 日 시민단체, 밀양 표충사 찾아 임진왜란 반성 집회(3/30, 연합뉴스)
 - 일본 시민단체가 16년째 한국을 찾아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는 집회를 열었음. 일본 근대사 연구가, 재일 교포 목사, 각종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NO MORE 倭亂(왜란) 집회 실행위원회’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경남 밀양시 표충사를 방문해 임진왜란을 반성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음.
 - 표충사에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1544~1610)의 영정이 모셔져 있으며, 집회는 임진왜란 희생 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기조보고, 한국 민요 제창 등의 순으로 40여분 동안 진행되었음.
 - 이 단체는 “일본은 조선 침략을 기점으로 1945년(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전쟁을 반복했다”며 “일본 사회는 이 과거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한 채 전후를 걸어왔다”고 지적하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을 ‘특정 비밀’로 지정해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을 비판함.
- 日집권당간부, “군위안부, 결론난 것을 몇번이나 문제삼아” 주장(3/31,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자민당 부총재는 이날 26~

29일 미국을 방문했을 때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副)장관과 회담하며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결론을 지었지만 몇 번이나 다시 문제로 삼고 있다. 우리는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지친다”는 발언을 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힘.

- 그는 이날 도쿄(東京)의 총리관저를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미국 방문 결과를 보고하고 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설명하며, 또 “한국이 중요한 나라이며 끈기 있게 얘기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고 전했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결론이 난 것이라는 고무라 부총재의 발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이에 관한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애초에 식민지배 중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일본군 위안부 등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 문제의 책임을 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음.

■ 정부 “日 강제징용지 등재, 세계유산 정신에 안맞아”(3/31, 연합뉴스)

- 정부는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한이 서린 현장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등록을 막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힘.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이 강제 징용을 당한 아픈 역사가 서린 이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는 세계유산 제도의 기본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 이어 “일본 측에서 등재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2011년 이래 우리의 입장을 계속 피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면서 “우리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거기서도 우리 입장을 강력히 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함.

■ 아베 日총리 역사인식 첫 시험대 반등회의…정부 주시(3/31, 연합뉴스)

-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인 올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역사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첫 계기는 4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 회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4월 29일)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내달 22~23일 열리는 이 회의는 이른바 ‘반동회의’ 개최 60주년을 기념한 성격이 강함. 아베 총리가 이 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어떤 수준으로 언급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망하였음.
 - 정부 내에서는 회의 장소가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인도네시아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과거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음. 또한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 연설을 할 때 올바른 역사인식을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런 입장을 미국 조야에도 전달하고 있음.
- **日외교청서 올해도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4/1, 연합뉴스)**
 - 일본의 외교백서격인 ‘외교청서’가 올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을 전망으로 보임.
 -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2015년판 외교청서 초안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취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일본 정부는 현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전의 민주당 정권 시절부터 이 같은 표현을 외교청서에 적시해왔음.
 - 또한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 규정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함. 이에 따라 작년 외교청서에 포함된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은 올해 청서 최종판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됨.
 - **방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일본군 위안부, 먼저 풀어야 할 문제”(4/1, 연합뉴스)**
 - 나경원(새누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였음. 이는 지난 2월 말 외통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첫 해외방문 외교 행보로, 나 위원장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츠치야 시나코(土屋品子) 중의원 외무위원장,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 등을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함.
 - 나 위원장은 기시다 외무상과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관계에 있어서 먼저 풀려야 할 문제”라면서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였음. 나 위원장은 오는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미국 의회 합동연설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기시다 외무상은 “서로의 국민감정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쌓이면 앞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면서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해하고 평가하는 연설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정부 “독도는 우리 고유영토…日도발에 단호대처”(4/1, 연합뉴스)

- 정부는 일본이 조만간 발표될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일본의 외교청서 발간과 관련,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분명히 밝히며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앞서 일본 외무성은 2015년판 외교청서 초안에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함.

■ ‘韓 독도 불법점거’주장 日중학 역사교과서까지 확산될 듯(4/1, 연합뉴스)

-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곧 검정 결과가 공개될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교과서 검정 사정을 잘 아는 일본 교육계 소식통은 오는 6일 문부과학성(교육부)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 소식통에 따르면, 출판사들이 검정 신청을 한 중학교 사회과의 공민·역사·지리 등 3개 과목 총 18권의 교과서 중 1~2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도 관련 기술키 들어갔으며, 독도 기술키 들어간 교과서는 대부분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음.
-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기술키는 이번이 없는 한 6일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상당수 일본 중학생은 앞으로 공민·역사·지리 등 3개 과목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게 될 예정임.

- 전후70년 담화 일 전문가 논의 “일본, 국제사회에 공헌”(4/2, 연합뉴스)
 - 종전 70년을 맞이해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를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공헌했다는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짐.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후 70년 담화를 논의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간담회’는 2일 총리관저에서 세 번째 회의를 열었음.
 -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개발 원조(ODA)를 비롯해 일본이 전후 국제사회에 공헌한 것을 외국에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일본은 음덕을 쌓아왔다. 대외공헌이 외국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식민지배와 침략’,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 사죄’ 등 무라야마(村山)담화의 핵심 표현을 반영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는 가운데 전후 일본의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논의가 이어지는 것은 담화 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울 것으로 예상됨.

- 아베 총리 “박 대통령과의 대화,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4/2,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리관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 국장(國葬)을 계기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에 관해 “분위기가 결코 나쁘지 않았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짐.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본 자민당 의원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고 나서 이 같은 아베 총리의 발언을 기자들에게 전함. 가와무라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 실현에 관한 아베 총리의 마음이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임.
 -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 리 전 총리의 장례식 종료 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리셉션장에서 만났음. 박대통령은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잘 취해 나가자”고 언급하였고, 이에 아베 총리는 3국 외교장관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관해 사의를 표했다고 전해짐.

- 자민당 2인자, 한인 비하 비속어 사용 물의(4/3, 연합뉴스)
 - 일본 집권 자민당의 핵심 간부가 한국과 관계없는 발언을 하던 중 제일 한국인과 조선인을 비하할 때 쓰이는 비속어를 사용해 물의를 빚었음. 자민당의 실질적

- 2인자인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은 3일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위해 오사카(大阪)시에서 가두연설을 하던 중 오사카 유신회를 비판하면서 ‘총(チョン)’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음.
- ‘총’이라는 표현은 원래 에도(江戸) 시대(1603~1867)에 하찮은 사람을 칭하는 말이었지만 20세기 들어 제일 한국인과 조선인을 멸시하는 표현으로 사용됐음. 현재 일본에서 방송금지 용어의 일종으로 분류돼 있는 비속어임.
 - 다니가키 간사장은 가두연설에서 오사카 유신회가 추진 중인 오사카 재편 구상(일명 오사카도 구상)과 관련, “유신회는 ‘총리 관저와 자민당 본부는 오사카도 구상에 찬성하고 있는데, 당의 부련(府連·오사카부연맹)은 반대하고 있다. (부련은) 바보다, 총이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데 좀 지나친 것 아니냐”고 말했음. 그는 이후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불쾌하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철회한다”고 말했음.

라. 한·러 관계

- 주한 러대사 “한반도 사드배치 위험…북핵문제 해결 복잡해져”(4/2, 연합뉴스)
 -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러시아 국경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음.
 - 티모닌 대사는 지난 1일 서울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이 미사일 방어체제의 한국 배치 자체가 지역 내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또한, “중요한 것은 (사드의) 기술적인 면이나 레이더 능력뿐 아니라 접경지대에 세계적 미사일 방어체제의 일부분이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안보 분야가 복잡한 동북아 지역에서 새 자극 요소가 생길 수 있으며 군비경쟁을 자극할 수 있고 한반도 핵 문제 해결 과정을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음.
 - 이와 관련, 6자회담 참여국인 러시아가 사드 배치 문제를 북한 핵 문제와 연계해 공개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사드를 둘러싼 갈등 양상은 한층 복잡해졌다는 분석임.

- 주한 러대사 “내달 승전 행사에 차대통령 참석 기대”(4/2, 연합뉴스)
 -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내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밝힘.
 - 티모닌 대사는 지난 1일 서울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행사 참석 문제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우리에게 최종적 결정을 알려주길 기대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양국 관계의 높은 수준과 우호 선린 협력”이라고 말했음.
 - 한편, 러시아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 하고 있지만 사드가 러시아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국경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위험하다. 우리는 이 미사일방어체제의 한국 배치 자체가 지역 내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 라고 말하며, “한국이 장점보다 혹시 단점이 더 많지 않으냐를 깊이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함.

마. 미·중 관계

- 방중 美재무장관 “기술경쟁 막는 시도에 우려”(3/30, 연합뉴스)
 -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왕양(汪洋) 중국 부총리와 만나 기업들의 기술 경쟁을 가로막는 정책과 환율통제 정책 등을 완화하라고 촉구함.
 - 주중 미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루 장관은 왕 부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 “강제된 기술이전과 최근의 금융분야를 포함한 (각 영역에서의) 기술경쟁을 막는 시도들에 대해 우리는 이미 우려를 분명하게 표명했다”고 말함.
 - 이는 중국이 최근 들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정보기술(IT) 품목 등 핵심산업 영역에서 외국상품의 진입을 배제한 채 국산으로 대체하려는 행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됨.
- 키신저 전 미 국무부 장관, 남중국해 문제에 ‘덩샤오핑식 인내’ 촉구(3/30, 연합뉴스)
 - 미국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덩샤오핑(鄧小平)’식의 인내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헨리 키신저(91) 전 미 국무부 장관이 28일 (현지시간) 주장함.

- 키신저 전 장관은 싱가포르 리관유(李光耀) 전 총리의 국장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관련) 논의에서 시급함을 없애야 한다”고 밝힘.
 - 그는 “덩샤오핑은 몇몇 문제에 대해 ‘모든 문제가 현 세대에서 해결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 접근했다”며 “(우리도) 한 세대쯤 더 기다리자, 하지만 현재보다 악화는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함.
- **마중, 중국 새 사이버보안 규제 놓고 충돌(3/31, 연합뉴스)**
 - 약 4천650억달러(약 511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거대한 정보기술(IT) 시장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정부가 충돌하고 있음. 중국을 방문한 잭 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IT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사이버보안법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함.
 - 루 장관은 30일 기자들에게 “곧 시행될 예정인 규제들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이곳에 있기를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놓을 수는 없다”고 비판함.
 - 한편, 최근 수개월 동안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산업정보기술부는 중국은행들에 당국이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 IT 장비만 구매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들을 내놓음. 또한, 이와 별도로 현재 초안이 마련된 테러방지법은 중국 관련 당국이 통신 및 인터넷 기업들의 소스 코드 같은 민감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임.
- **미국 “AIIB와 협력할 것”…가입에는 부정적(3/31, 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 중인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은 중국이 추진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함.
 - 루 장관은 전날 오후 베이징(北京)에서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와 만나 양국의 협력은 미중 전략경제대화(SED), 세계은행(WB)과 AIIB, 양국이 합의한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또 미국은 AIIB가 ‘질 관리구조’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와 관련해 중국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중국이 국제경제 문제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뜻도 표명함.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일부 관측통을 인용,

“루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AIIB 참여 가능성은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 “미국의 AIIB 대응 엉망”(4/1, 연합뉴스)
 -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음.
 - 그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행사에서 AIIB 설립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엉망이었다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며, 이어 AIIB 설립을 중국의 권력 장악 시도로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이 투명성과 규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기회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음.
 - 또한,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같은 국제 기관 에서 미국이 보유한 투표권을 조정하는 미 의회 내 작업이 지연되면서 중국이 AIIB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음.

- 美태평양사령관 “中, 남중국해에 모래장성 쌓아”(4/1, 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은 중국이 영해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인공 섬을 만드느라 ‘모래로 만든 장성’을 쌓아 주변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언급함.
 - 그는 “중국이 살아있는 산호초 군락 위에 모래를 퍼부어 인공 부지를 만든 다음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공 땅 면적이 벌써 4km²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이 해역은 아름다운 자연 섬들로 유명했으나 “중국은 정반대로 수 개월 동안 준설기와 불도저를 이용해 모래 장성을 만들었다”고 비판함.
 - 해리스 사령관은 인공섬 건설과 관련, “중국의 의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 한다”면서 인공섬들이 중국의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시설 등으로 쓰일 것을 경계했음. 이어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고조되지 않도록 서로 절제하자는 내용의 ‘2002년 중국-아세안 행동선언’을 지지한다면서 “이 지역이 대립이나 협력으로 나갈지는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함.

- 중국, 사이버 공격 美 제재명령 비판(4/2,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미국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 한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중국은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자신의

- 국내법으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나 단체에 대해 걸핏하면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에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발표함.
- 화 대변인은 “인터넷 안보는 각국의 공동 이익과 연관된 것으로 인터넷 공격은 초국가적이며 진원지 추적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초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사이버 공격을 ‘국가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해커 및 해킹 연루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바. 미·일 관계

- **美역사학자들 “집단성명 철회없다”…하버드대 지일파교수도 가세(3/26, 연합뉴스)**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역사왜곡 행태를 비판하는 미국 역사학자들의 집단성명을 주도한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 대학 역사학과 교수는 25일 (현지시간) “일본 극우세력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성명을 철회 하거나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더든 교수는 최근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니혼(日本)대 명예교수 등 일본 보수학자 19명이 미국 교과서에 나온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연합뉴스에 이메일을 보내 이같이 강조하며, “일본군 위안부는 국가가 후원한 시스템에 간혀 인권을 유린당한 역사적 사실 자체이며 우리 역사학자들은 이와 관련한 연구와 저술, 강의 활동을 하는 이들의 학술적 자유를 지지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앞서 하타 교수 등은 지난 17일 도쿄(東京) 주일외국특파원클럽(FCCJ)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출판사 맥그로힐사 교과서의 군위안부 기술 중 8곳에 대한 수정을 공식으로 요구했음. 하타 교수는 지난해 고노(河野)담화 작성 과정 검증에 참여한 인사이고 일부는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나 일본 최대 규모의 극우 단체인 ‘일본회의(日本會議)’와 관련된 학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아베 총리 美상·하원 연설은 강고한 미일관계 시사”(3/27,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내달 29일,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게 되는데 대해 “강고한 일미관계를

세계에 보여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힘.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후 70년간 우리나라의 행보를 세계에 발신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덧붙이며, 이어 “(전후) 70년간 우리나라가 걸어온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법의 지배가 세계에서 그 공헌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로 이어진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음.
- 그는 또 미일관계에 대해 “전후(戰後) 화해를 하고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공고한 동맹국으로서 함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다”고 자평했음.

■ 미국, 자위대 대미지원확대 환영...“역사적 시도”(3/27,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자위대의 대미지원 활동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일본의 안보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해 “역사적 시도”라며 크게 환영했음.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을 방문한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일본 연립 여당(자민·공명) 사이에 합의가 도출된 안보법제 정비 관련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카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내달 말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에 대해 “동맹의 견고함을 세계에 알리는 장으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 측도 확실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무라 부총재와 통화한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 아베 일본총리, 4월29일 사상 첫 상·하원 합동연설(3/27,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에서 합동연설을 하게 되었음. 일본 총리가 미국 상·하 양원이 모두 소집된 가운데 연설을 하는 것은 사상 처음임.
-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베 총리에게 다음 달 29일 미국 상·하원에서 합동연설을 해달라고 초청했다”고 밝힘.
- 베이너 의장은 “미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의회를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아베 총리의 연설은 미국인들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부터 경제와 안보협력 확대 방안을 청취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안들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나는 열렬한 아베 지지자”…위안부 문제 해결도 촉구(3/27, 연합뉴스)

-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을 “열렬한 아베 지지자(a great admirer of Mr. Abe)”라고 밝히면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다음 달 미국 방문 및 미 의회 연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 매케인 위원장은 “일본에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강한 지도자와 안정된 정부가 나왔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군사협력이 우수한 데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케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미 정치권 일각에선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해 경제·안보 측면에서 금지 막한 ‘선물’을 들고 오는 아베 총리를 띄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한편, 매케인 위원장은 이와 함께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촉구함. 그는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두 동맹인데 그런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점이 나쁠, 그리고 두 나라 모두의 친구인 우리 모두를 가슴 아프게 한다”면서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감안하면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모두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日안보법제개정안, 美지일파 제언 대거 반영”(3/30,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중인 안보법제 정비 방안이 미국 정계의 지일파 인사들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함.
- 공화당 인사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副) 장관과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이 작성한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이하 보고서)’ 2012년판이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 정비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고 아사히는 전함.
- 보고서 2012년판은 “일본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것을 일본 측에 촉구함. 이는 작년 7월 아베 내각의 각의(국무회의) 결정과, 지난 20일 합의된 일본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의 안보법제 정비안 골간에 반영되었음.

- 일본정부, 오키나와 미군기지 공시중단 지시 ‘무효화’(3/30, 연합뉴스)
 - 오키나와(沖繩) 주일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沖繩) 현 당국 간 대립이 맞대결 양상으로 격화될 전망이다.
 -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오키나와의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 이전 예정지인 헤노코(邊野古) 연안에서 오키나와 방위국이 강행 중인 해저 지질조사 등을 중단하라는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 지사의 지시를 일시 무효화하는 ‘가처분 조치’를 결정함.
 - 이에 따라 오키나와 방위국은 헤노코 연안부 매립에 앞선 해저 지질조사를 일단 계속할 수 있게 되었음. 반면 오키나와현 당국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맞서 대항책 등을 강구 중이며, 특히 오는 4월 23일이 기한인 정부의 최종 재가가 나오게 되면 재가 무효를 요구하는 법률 대응 등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됨.
- 일본 TPP 교섭대표, 오바마 대통령에 “TPP 직접 설득” 촉구(3/30, 연합뉴스)
 -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위한 신속협상권(TPA) 확보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TPP 교섭대표인 아키라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의 손에 놔둬선 안 되고 그가 직접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시간 제약들을 맞고 있지만,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 덧붙임.
 - 일본 측 교섭대표의 이 같은 이례적 호소는 사실상의 협정 체결 시한이 수개월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됨.

- **美 코리아코커스 의장 “아베 총리, 과거 잔혹행위 분명히 인정하라”(3/31, 연합뉴스)**
 - 게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30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기로 한데 대해 “아베 총리는 과거 일제가 식민 지배와 태평양 전쟁 중 저지른 잔혹행위를 확실하고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고 밝힘.
 - 미국 하원의 지한파 의원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코널리 의원은 이날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임소정)에 전달한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폄하하거나, 일본 정부의 뉘우침을 약화시키는 노력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함.
 - 코널리 의원은 “안타깝게도 아베 총리는 일본군 전쟁 범죄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도발적인 발언으로 이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해왔다”고 비판하였음. 이어 “일제에 의한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들의 고통을 일본은 명백히 이야기해야만 한다”며 “아베 총리의 뚜렷하고 확연한 성명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로 공유하는 역사의 어두운 장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미 국무부 “위안부는 성을 목적으로 한 여성 매매 행위”(3/31,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30일(이하 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性)을 목적으로 여성을 매매한 행위(the trafficking of women for sexual purposes)”라고 규정함.
 - 국무부 대변인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7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희생자’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함.
 -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지난 2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성을 목적으로 한 일본군의 여성 매매 행위는 끔찍하고 극악한 인권위반”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으로, ‘인신매매’처럼 주체와 목적이 없는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사건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규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미·일 국방장관 8일 회담…집단지위권 행사 등 논의”(4/1,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8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만나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문제를 논의한다고 교도통신이 지난달 31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소식통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평화유지군 증원, 자위대 해외 활동 등의 내용을 담은 안보법안의 진행 현황을 설명할 전망이다.
-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일본의 안보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미·일 방위협력지침도 개정해야 함. 또 오키나와(沖繩)현 본섬 남쪽 기노완(宜野灣)시에 위치한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비행장)를 오키나와 북부 헤노코(邊野古) 연안에 이전하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미·일 국방 “방위지침 동맹 현대화의 이정표”(4/1,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에게 전화를 걸어 미·일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이날 밝힘.
- 오는 8일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카터 장관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미·일 동맹 강화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음.
- 양국 장관은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이달 말 방미 때 발표할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미·일 동맹을 현대화하는 데서 주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가 전했음. 1997년 이후 18년 만에 재개정되는 신(新) 방위협력지침은 미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양국군의 협력 범위를 지리적 제약 없이 넓힌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어 아태 지역 안보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사. 미·러 관계

■ 미·러, 우주정거장 2024년까지 연장 운영 합의(3/29,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사태로 제2의 냉전을 방불케 하는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 분야 협력은 계속하고 있음.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우주청(로스코스모스)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8일(현지시간) 국제우주정거장(ISS) 공동운영을 2024년까지 연장

하는 협정에 서명하였음. 양국은 또 ISS를 폐쇄한 뒤 새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도 힘을 합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과의 갈등으로 2020년 이후까지 ISS 운영을 연장하지는 미국 측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으나 이를 완화한 것으로 보임. 러시아는 당초 2020년까지만 ISS 운영에 참여하고 이후 독자 우주정거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음.

■ 마우크라 감시단, 러시아 영공 사찰 비행(3/30, 연합뉴스)

- 미국과 우크라이나 감시단이 러시아 영공을 사찰 비행한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30일(현지시간) 밝힘.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갈등 관계에 있는 러시아의 영토를 사찰하는 것으로 군비 통제를 위한 국제조약인 ‘항공자유화조약’에 따른 것임.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공동감시단은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미군 정찰기 OC-135B를 이용해 러시아 영토에 대해 사찰 비행을 벌임. 이를 통해 감시단은 러시아의 군사활동과 군비 상황 등을 살피게 될 것임.
- 이번 사찰 비행은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의 와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서부 지역으로 군대를 집중 배치해 두고 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져 주목을 끌고 있음.

■ “러시아군, 3월 핵무기 선제사용 상정 훈련”(4/2, 연합뉴스)

- 러시아군이 지난달 중순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상정한 대규모 군사연습을 실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 1주년에 즈음해 지난달 16~21일 열린 군사 연습때 러시아군이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을 북극권에 전개했다는 내용이 러시아 대통령궁(크렘린궁) 홈페이지에 소개됐다고 통신은 전함.
-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한 보고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고, 또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합참의장)은 최신 지휘계통을 통해 “해양에 배치한 핵전력에 전투를 제어하는 신호를 직접 보냈다”고 밝힌 것으로 홈페이지에 소개됨.

아. 중·일 관계

- “중공산당-日여당, 교류재개 방침 확인”(3/23, 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과 일본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이 당 대 당 교류를 재개하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NHK가 23일 보도했음.
 -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위정성(俞正聲)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이날 중국을 방문한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과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공명당 간사장 등 일본 연립여당 간부들과 만나 2009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중일여당교류협의회’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NHK는 전했다.
 - 그러나 위 주석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여름에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와 관련, “중국인의 감정에 부응해가며 일본이 평화 발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후 70년은 한 번의 기회이니 일본 측에서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과거의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고노(河野) 담화를 계승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중국, 일본의 항모급 호위함 배치에 ‘경계감’(3/26, 연합뉴스)
 - 일본이 최근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인 ‘이즈모’를 실전 배치한 데 대해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본 해상자위대에 편입돼 공식 취역한 이즈모는 기준 배수량 1만9천500t, 길이 248m, 폭 38m의 규모임.
 - 중국 참고소식(參考消息)은 이에 대해 외신을 인용, 이즈모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예정인 F-35B형 스텔스 전투기(단거리/수직이착륙(STOVL) 기종)을 실을 수 있다고 보도했음. 이는 언제든 항공모함으로의 변신이 가능하다는 주장임.
 - 특히 이즈모라는 명칭이 과거 중국대륙을 포격했던 일본해군 소속 기함의 이름과 동일하다는 점은 중국에 더욱 도발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 기함 이즈모는 중국군이 일본군의 대륙침략에 맞서 벌였던 제1차 ‘쯙후(淞滬<물수변+戶>) 결전(1937년 8월13일)’ 당시 상하이(上海)를 포격했던 것으로 알려짐.

- 중국, 미일동맹에 ‘냉전의 산물’ 비판(3/31, 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최근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동향에 “우리는 미일 동맹이 냉전시기 형성된 일종의 특수체제로 본다”며 비판을 가했음.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미일 군사협력) 양자관계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지역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서는 더욱 안된다”며 이같이 밝히며, 또 “우리는 미일 간 협력과 관계 발전이 지역의 평화·안정과 발전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작용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미국과 일본은 내달 27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다음날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을 열어 안보 법안과 연동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관해 합의할 예정임.

- 주중 일본대사 “일본, 6월 AIB 가입 가능성”(3/31,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테라 마사토(木寺昌人) 중국 주재 일본 대사가 밝힘.
 - 기테라 대사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한 효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AIIB 가입을 위해 업계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업계의 기대대로 오는 6월 일본 정부가 AIIB에 가입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함.
 - 지금까지 중국에 AIIB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국가는 한국, 영국, 호주 등 42개국이며 세계 경제 주요국 가운데 미국, 일본, 캐나다만 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 일본 정부는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AIIB 가입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하지만 최근 영국, 호주 등이 잇달아 가입의사를 밝히면서 일본만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음.

- 中, 일본의 센카쿠 영유권 주장에 “역사직시하라” 반박(4/1, 연합뉴스)
 - 중국은 일본이 “중국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대해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일방적 행동으로 현상을 변경한 것은 일본 자신”이라고 반박했음.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내용이 공개된 일본의 외교청서 초안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우리는 일본이 현실과 역사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이

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2015년 판 외교청서 초안에서 중국 정부 선박의 센카쿠 열도 12해리 수역 진입을 거론하며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무라야마 前총리 “중일, 센카쿠 공동개발해야”(4/2, 연합뉴스)

- 1995년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중일 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양국이 공동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콩 봉황(鳳凰)위성TV에 따르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전날 도쿄 현지에서 한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 주권에 대해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마땅히 공동으로 개발해 함께 이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효과적인 개발을 통해 양국이 이익을 배분하고 함께 이용하며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섬은) 양국이 모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무라야마 담화 수정 의도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말은 형식적인 표현일 뿐 실제로는 일본의 역사인식을 수정하고 침략전쟁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침략을 인정하고 반성·사죄하며 20년 전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함.

■ 中부총리급 인사, 8일 일본 방문(4/4, 연합뉴스)

- 중국의 부총리급 인사인 지빙쉬안(吉炳軒)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인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8~11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 지 부위원장은 일본 국회 초청으로 방일, 약 3년 만에 열리는 양국 국회 교류위원회에 참석하고,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중의원 의장과 면담하는 방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 중국의 부총리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하기는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국유화한 이후 처음임.

자. 중·러 관계

- 러시아·중국, 2020년까지 교역 2천억 달러로 확대(3/28, 연합뉴스)
 - 러시아와 중국이 양국 간 교역확대를 추진한다고 타스통신 등이 보도함. 겐나디 팀첸코 ‘러·중 사업위원회’ 러시아 측 대표는 이날 중국 하이난(海南)성에서 열린 보아오(博鳌) 포럼에서 “올해 양국 교역을 1천억 달러로, 2020년까지 2천억 달러로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야심차지만,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강조함.
 - 팀첸코는 “양국의 굳건한 협력은 친밀감과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였으며 오늘 그 관계는 새롭게 나아갔다”고 덧붙이며, “앞으로 양국의 주요협력은 금융, 에너지 분야 및 인프라 사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루블화와 위안화의 상호 결제확대와 유라시아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조기추진 등을 제안함.
 - 앞서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고르 슈바로프 러시아 부총리는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러시아도 참여하겠다고 밝혀 중국의 아시아 금융권 통합구상에 힘을 실어주었음.

- 러시아 “2차대전 승전기념식서 시진핑은 특수대우”(4/2, 연합뉴스)
 -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따르면 러시아 대사관 공보관은 중러 양국의 관계는 특수하기 때문에 내달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 제2차 세계대전 대(對) 독일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특수대우’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 또한, 환구시보는 러시아 언론 보도를 인용, 안드레이 데니소프 주중 러시아 대사가 최근 ‘2차대전 결산’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시 주석은 70주년 승전기념식의 주요손님”이라고 밝힌 내용도 함께 전했다. 주중 러시아대사관은 이번 2차대전 승전 70주년을 맞아 오는 15일 중국 노병 40명에게 ‘위대한 조국 수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메달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힘.
 - 러시아 측의 ‘시진핑 특수대우’ 발언과 중국인 노병에 대한 표창 계획 등은 양국이 올해 각종 2차 대전 관련 기념식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강력한 밀착행보를 연출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차. 일·러 관계

- “푸틴 대통령 측근 러시아 하원의장 5월 방일”(3/29,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하원의장이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키 위해 5월 일본을 방문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음.
 - 나리슈킨 의장은 5월 20일 도쿄에서 열리는 러일 문화교류 행사 개최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그 기회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포함한 일본 정부 요인들과 면담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한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 기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아베 총리 등 정부 핵심인사와 나리슈킨 의장의 회동이 성사될지는 속단하기 어려워 보임.

- “아베 총리, 러시아 승전 70주년 행사 불참할 듯”(3/30,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2차대전 대(對) 독일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불참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함.
 - 아베 총리는 5월 9일 열리는 승전 기념 행사에 초대받았지만 러일간에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이 쏠렸다고 신문은 소개했음.
 - 일본 안에서는 행사에 아베 총리가 참석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내 일본 방문 실현을 위해 양국 정상에 대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짐.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식량 사정 개선 불구 영양 결핍 여전(3/25, 자유아시아방송)
 - 전 유엔 직원인 크랑키스카 메가라디 씨는 24일 미국 개발 전문 웹사이트, DEVEX에 기고문을 내고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식량 안보)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최근 평양에서 2년을 거주한 경험이 있는 메가라디 씨는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이 개선된 원인 중 하나로 북한의 경제 개선을 꼽고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를 인용해 “지난 5-7년간 북한에서의 삶의 수준이 뚜렷이 향상되었다”고 전했다.
 - 또 북한의 식량 생산량도 증가했다면서, 2013년에 북한에서 실행된 농업 개혁으로 ‘가정을 기반으로 한 사립형 농업’이 발달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 6.28방침 덕분에 농민들은 한두 개 농가로 구성된 분조를 만들고 전체 수확량의 30%까지 가질 수 있게 돼 식량 상황이 나아졌다는 설명임.
 - 메가라디 씨는 또 세계식량계획의 전임 부국장 레오 반 데 렌던 씨를 인용해 “북한의 식량 안보의 문제점은 질적인 데 있다”며 “어린이들이 성장기에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단백질 등의 영양소를 제때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발육부진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북한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혜택이 전체 주민에게 골고루 나눠져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영양 결핍”이라고 전했다.
- “북 주민, 임금착취 해외근로 꺼려”(3/27, 자유아시아방송)
 - 평양의 한 소식통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돈 버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외국에 가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굳이 가겠냐며 생각을 접는 주민들이 꽤 많아졌다”고 밝혔다.
 - 이 소식통은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나갔던 한 남자는 3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아직 받기로 한 노임을 절반도 받지 못했다”면서 “빚이 없으니 제 돈도 찾지 못하고 병을 만나 앓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북한 근로자는 한 달에 100달러씩 받기로 하고 3년 동안 나미비아에 파견되었으나, ‘충성의 자금’으로 30%를 떼이고, 보험과 식비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월급은 약 50달러를 약간 웃돌았다는 것임.
 - 소식통은 “이런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록 이 사람뿐 아니라 러시아에 갔던 사람도 있고, 중국에 갔던 처녀들도 있다”고 말해 북한의 해외 근로자 처우가 전반적으로 열악함을 꼬집었음.
 - 이러한 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해외 근로를 기피하는 주민들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음.
 - 최근 북한 장마당이 활성화 되어 있어서도 외화를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점도 주민들이 외국행을 꺼리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북한은 올해 광복 70주년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크게 치르는 데 드는 재정확충을 위해 대규모 인력수출을 기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음.
 - 하지만 이 같은 해외근로자 인권문제가 제기되자, 유엔 차원에서 북한 해외근로자 인권실태에 관해 조사할 것이라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음.
- 북한 외무성, 유엔 인권결의 비난…“초강경 대응“(3/28,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28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미국의 적대정책 산물로 규정하며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음.
 -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유엔인권무대에서 벌어진 ‘결의’ 채택놀음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며 “광란적인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릴 확고한 의지를 명백히 천명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외무성은 “우리의 인권문제라는 것이 한갓 사기협잡품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낱알이 드러났다”며 결의안 채택이 “우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우리에게 대한 간섭과 침략의 구실을 만들어내려는 비열한 속내”라고 비난했음.
 - 그러면서 “미국은 더 이상 ‘인권재판관’이나 되는 듯이 행세하면서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권불모지로 규탄받고 있는 자기 집안의 인권상황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외무성은 “미국과 적대세력이 인권모략소동에 광분할수록 단호한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심과 의지는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며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어찌보려는 것은 실현될 수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음.

-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북한이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음.

■ “북한 내 마약 사용 만연...단천 등 국경 도시 심각“(3/28, 미국의소리)

- 미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5 국제 마약통제 전략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마약의 일종인 필로폰 사용이 크게 늘었으며 중국에 대한 밀매도 활발하다고 밝혔음.
- 북한의 마약 실태를 연구하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김석향 교수는 필로폰이 1990년대 말 함경남도 함흥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음.
- 일본의 북한 문제 전문가로 현재 워싱턴의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 방문연구원인 마키노 요시히로 씨는 북한산 필로폰의 순도와 품질을 감안할 때 국가기관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음.
- ‘빙두’ 또는 ‘얼음’으로 불리는 북한산 필로폰은 처음에는 주로 중국에 밀수출됐는데, 탈북자들에 따르면 필로폰은 북-중 국경을 넘어 중국에 들어갈 경우 가격이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정도 뛰는 것으로 알려졌다음.
- 함흥에서 시작된 필로폰은 인근 도시들 뿐 아니라 라진, 선봉, 혜산과 회령, 신의주 같은 국경도시는 물론 평양에도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음, 특히 함경남도 단천의 경우 마약 사용이 너무나 만연해 ‘도시가 절단 났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라고 함.
- 주목할 점은 필로폰이 돈과 힘을 가진 노동당 간부들에게 집중적으로 퍼졌다는 것으로, 마약이 노동당 최고위층까지 퍼졌다는 것은 북한의 장성택 숙청 발표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음.
- 북한 당국도 마약 거래자를 사형에 처하겠다는 포고문을 붙이는 등 단속을 하고 있지만 별 효과는 없다고 함.
- 김석향 교수는 마약이 청소년들에게까지 퍼지는 것은 위험한 징조라며 북한 당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마약의 위험성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음.

- 북한, '간첩사건' 내세워 대남 적개심 고취(3/29,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남한 간첩사건'을 전면에 내세워 남한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음.
 - 김정은 정권이 간첩사건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내부 결속을 다짐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괴뢰정보원 간첩들과의 기자회견 소식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고 있다"고 밝혔음.
 - 북한은 지난 26일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을 '국가정보원 간첩'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암살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정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한은 통지문 수령조차 거부했음.
 - 노동신문은 김 씨와 최 씨가 북한의 '최고준엄'을 해치려 했으며 "이것이야말로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 시대의 무자비한 철추를 받아 마땅할 천하만고의 대역죄"라고 비난했음.
 - 신문은 김 씨와 최 씨가 북한의 인권유린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조작했다고 자백한 사실도 거론하며 "반공화국 인권 모략에 이끌리 난 괴뢰정보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가 언제가도 개선될 수 없다"고 경고했음.
 - 북한은 이번 사건을 규탄하는 데 일반 주민들도 동원하며 대남 적개심을 확산시키고 있음.
 - 정치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김정은 정권이 이번 사건을 최대한 활용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음.

- 북한 조평통 "인권사무소 개소 즉시 무자비한 징벌"(3/30, 연합뉴스)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0일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되는 즉시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음.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에서 북한인권사무소에 대해 "절대로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모략소굴이 남조선에 등지를 트는 즉시 우리의 무자비한 징벌의 과녁으로, 첫째가는 타격대상으로 될 것이다"라고 밝혔음.
 - 조평통은 남한이 유엔인권이사회 제28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적

극 나서고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추진한 것에 대해 “존엄과 체체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 할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음.

- 또 북한이 간첩 혐의로 우리 국민 2명을 억류한 것을 거론하며 남한은 인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강변했음.
- 이어 “괴뢰패당은 반공화국 인권모략 광란극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비참한 후과를 빚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北, 독일 대북지원단체 관계자 추방(4/2, 연합뉴스)

- 북한이 독일의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를 추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독일 대북지원단체 세계기아원조는 북한 당국이 지난 2월 26일 이 단체의 북한 지부장인 레지나 파인트 씨를 추방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음.
- 세계기아원조는 북한이 지난 2월 말 파인트 지부장에게 북한을 떠나달라고 요구하고, 그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또, 파인트 지부장의 행동 가운데 북한의 추방을 정당화할만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 단체는 또, 파인트 지부장의 동료이자 북한에서 12년간 근무한 칼 폴 씨도 지난달 19일 북한을 떠났지만 그의 출국은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계기아원조는 독일의 대규모 비정부기구 단체 중 하나로, 1997년부터 북한에서 원조 활동을 해왔고, 이 단체가 지금까지 북한 식량 프로젝트 등에 지원한 금액은 6천만 유로, 우리 돈 약 710억 원가 넘음.

■ 북한 “라오스 복송 청소년 대학생 됐다“…처형설 부인(4/5, 연합뉴스)

- 북한이 2년 전 라오스에서 강제 복송된 탈북 청소년들의 대학 입학 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인권단체 물망초의 ‘처형설’ 주장을 또 정면으로 반박했음.
-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5일 ‘조국의 품에 안겨 오늘은 대학생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3년 5월 라오스에서 복송된 청소년 9명 중 영웅혜산제1중학교를 졸업한 4명이 대학에 입학했다고 밝혔음.
- 통일신보는 “문철은 평양건축종합대학에, 박광혁은 김형직사범대학에, 정광영은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류광혁은 평양인쇄공업대학에 입학해 어엿한 대학생이 됐다“고 전했다.

- 이어 “그런데도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의 극우보수언론들과 반북대결분자들은 이들이 처형됐다느니, 수용소에 갇혀 있다느니 했으니 이보다 추악한 행위는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음.
- 통일신보는 이날 기사와 함께 문철·박광혁이 꽃다발을 안고 각각 학교 정문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 정광영·류광혁이 강의를 듣는 모습 등 4장의 사진을 실었음.

2. 북한 인권

- 독 의회에서 북 인권 개선 방안 논의(3/23, 자유아시아방송)
 - 독일의 북한인권 단체 ‘사람’은 독일 의회 내 ‘인권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위원회’ 의원들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음.
 - 슈프리켈스 대표는 40여 개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의 권은경 사무국장과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독일의 역할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 남북한과 동시 수교국인 독일이 중립적 위치에서 북한과 독일, 북한과 유럽연합, 혹은 남북한이 인권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슈프리켈스 대표는 강조했다.
 - 미하엘 브란트 위원장과 프랑크 하인리히 의원 등 위원회 소속 독일 의원들과 독일과 한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독일의 입장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 슈프리켈스 대표는 독일이 외교력을 발휘해 북한의 긍정적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북한이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후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거세진 압박에 반발만 하고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북한이 정치범수용소 존재를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일부 수감자를 석방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
 - ‘사람’은 일반 독일인들에게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데 주력하는 반면 다른 인권단체들과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도 논의해 나갈 예정임.

-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올 2분기 개소(3/25, 미국의소리)
 -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할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2분기에 서울에서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밝혔다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실은 현재 한국 정부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행정적인 문제들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를 권고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3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음.
 - 이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현장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고,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제안을 수용했음.
 - 이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 외교부, 서울시와 현장사무소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 설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해 왔고, 직원 채용 절차도 밟았음.
 - 앞으로 현장사무소는 COI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침해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됨.
 -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16일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현장사무소가 유엔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해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돼 있는 북한인권 결의안은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도록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했음.
 - 아울러 현장사무소가 북한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보고하고, 내년 3월 회의에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음.

- 북한자유연합, 다음 달 미국서 북한 자유 촉구 행사(3/26, 미국의소리)
 - 미국의 북한인권 전문가 수잔 솔티가 이끄는 북한자유연합이 다음달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수도 워싱턴DC에서 제12회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연다고 전했다.
 - 북한자유연합은 24일(현지시간) 이런 계획을 알리면서 올해는 한반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자유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다음달 26일 북한 자유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으로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 헌화, 기자회견, 사진전시회, 영화상영회, 중국대사관 앞 시위 등을 진행할 계획임.

- 북한자유연합은 또 미국 의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 관련 법안 ‘북한제재이행 법안’ (HR1771) 통과도 촉구할 예정임.
- 이 단체는 이번 행사와 별도로 탈북자들이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에 대해 증언하는 청문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영, COI보고서 1년 ‘북한 인권청문회’(3/27, 자유아시아방송)

- 런던의 웨스터민스터에 위치한 영국의회에서는 지난 24일 영국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 관련 상, 하원 공동위원회(APPG) 그룹이 주관한 북한인권청문회가 열렸음.
- 영국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 그리고 영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단체들과 북한인권 관련 NGO단체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가 참가한 이날 청문회에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보고서가 나온 이후 지난 일 년 간의 북한인권 변화에 대한 경과보고와, 향후 COI보고서에 근거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과제들을 토론했음.
- 행사 사회를 주관한 APPG그룹 의장인 데이빗 알톤 상원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APPG그룹은 COI보고서가 북한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유린에 대해 탈북자들이나 북한주민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플랫폼, 즉 근거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음.
- 첫 발표자는 한국의 ‘성통만사’ 북한인권관련단체 김영일 대표로, 지구상에 최악의 인권불모지인 북한의 인권문제는 어떤 유행이나 시기를 타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며 아직도 전혀 변하지 않은 북한의 인권유린 현실을 강도 높게 지적했음.
-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국제탈북민연대’ 관계자는 COI보고서가 나온 이후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에 대한 북한정권의 교묘한 입장에 대해 북한주민의 시각으로 분석했음.
- 그는 북한정권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가며 일부의 정치범 수용소들을 이주, 통합, 은폐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심지어 지난해 9월 ‘조선인권연구협회’라는 간판을 내세워 자체 거짓인권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사회의 인권공세에 맞대응하는 등 요지부동하던 과거의 반응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3/27, 연합뉴스)
 - 유엔 인권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인권 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음.
 -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28차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출한 이런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27, 반대 6, 기권 14표로 채택했음.
 - 이 결의안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강제실종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패널 토론을 개최하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패널 토론을 주관하도록 했음.
 - 결의안은 또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보고하고, 내년 3월 회의에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음.
 -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고,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음.
 - 미국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는 대부분 최고위층이 만든 정책을 수행하면서 자행된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부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인 북한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음.
 - 이에 대해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패널 토론을 하도록 한 것은 이 결의안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면서 “핵심 증인의 증언이 허위로 드러난 COI 보고서에 기초한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안은 무효”라고 주장했음.
- 유엔 “북한 장성택 처형은 국제법 위반”(3/28, YTN)
 -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2013년 북한의 장성택 처형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한 것을 밝혔음.

- 유엔인권이사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장성택과 측근인 리룡하, 장수길을 공개처형한 것은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고 방송은 전했다.
 -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진상 규명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도 유엔 인권결의에 저촉되며, 사형 집행 과정에서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벌을 금지하는 국제관례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앞서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은 2013년 북한에 공식 서한을 보내 장성택 등의 처형 경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이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 **앰네스티 “북, 공개처형 등 사형 폐지를”(3/31,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1일 전 세계 사형선고와 집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 이 단체의 사형제도 전문가인 키아라 산조르시오 아시아담당은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 등 사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포함해 중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 9개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 보고서는 특히 북한과 중국 등의 국가들은 사형과 관련한 자료를 국가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산조르시오 담당은 그러나 북한이 공개처형 등 사형을 광범위하게 집행하고, 심지어 형법을 개정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국제앰네스티는 이 같은 인권 유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고 특히 고문을 통해 억지 자백을 강요하는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서 북한인권 다양한 행사(4/2, 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의 비정부기구 북한정의연대가 오는 11일과 25일에 서울 인사동에서 ‘북한 인권 거리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 이 기구는 이번 캠페인이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기획됐다면서, 탈북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이번 거리 캠페인에서는 또, 중국 정부에 맞서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북한정의연대는 밝혔다.
- 또한 오는 18일에는 서울의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희화화한 미국 영화 ‘인터뷰’(The interview)와 북한 소녀와 매스 게임, 즉 대규모 집단 공연에 대해 그린 영국 영화 ‘어떤 나라’(A State of Mind)가 무료로 상영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3. 탈북자

- 스웨덴 이민국, 탈북 주장 소년 사건 재심사(3/26, 미국의소리)
 - 스웨덴 이민국이 자신을 탈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모 군의 난민 신청에 대해 재심사에 들어갔다.
 - 이민국은 이민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이 군 사건을 난민과로 다시 넘겼다는 것임.
 - 이민법원은 지난 6일 이민국에 대해 이 군의 난민 신청을 재심사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군에 대한 이민국의 면접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임.
 - 이민국은 법원 판결에 대해 3주 안에 항소할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고, 이 군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고 재심사하라는 법원을 명령을 받아들였다는 게 뱁손 대변인의 설명임.
 - 그는 현재 이민국의 난민심사가 6개월 이상 걸리고 있지만 이 군의 경우 3~4개월 안에 끝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 군 사건은 재심사인 만큼 대부분의 조사는 이미 끝난 상황이고 관련 정보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임.
 - 게다가 법원이 이 군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고 재심사하라고 판결한 만큼, 일반 난민 신청과는 달리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게 뱁손 대변인의 설명임.

- 뱅손 대변인은 재심사가 끝나면 이 군을 한국으로 보낼지 아니면 스웨덴에 계속 머물게 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먼저 한국 정부와 이 군, 그리고 이 군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해 이 군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임.
 - 만약 한국행이 불가능하거나 이 군이 스웨덴에 계속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뱅손 대변인은 이 군의 경우 이미 스웨덴에 입국한 지 2년이 지났고 그동안 스웨덴에 지인들도 생긴 만큼 스웨덴 정착을 허가하기에 조건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 “北탈북자 가족 일거수일투족 감시…용광로서 강제노동”, 소식통 “청년 2명, 부모 탈북했다는 이유로 심한 감시·통제”(3/30, 데일리NK)
 - 북한 내 탈북자 가족들이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북한 당국은 남한 탈북자 가족의 영향을 받아 이들이 탈북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음.
 - 황해남도 소식통은 “부모가 탈북 했다는 이유로 20대 청년 두 명이 해주시 대곡동에 있는 해주연결농기계공장 용광로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하루 1분의 자유도 없이 보위부와 공장 간부들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 이어 “해주농기계공장은 일이 힘들기로 소문난 곳인데, 당국은 부모가 탈북했기 때문에 이들이 부모를 따라 탈북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곳에서 이들을 일하게 했다”면서 “이들은 위험분자라는 낙인이 찍혀 공장 간부들의 감시 속에 공장에서 숙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특히 소식통은 “이들은 탈북자 가족이라는 딱지 때문에 사사로운 행동도 탈북을 준비하는 것으로 취급되며, 공장 측은 30분에 한 번씩 이들의 동향과 행적체크를 보위부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당사자는 물론 공장간부들도 보위부 시달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 “남한 탈북자들 삶 비참“…재입북 권유(4/2, 연합뉴스)
 - 탈북자에 대해 비난 일색이었던 북한이 최근 이들의 열악한 삶을 부각하고 향수를 자극하며 재입북을 권유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음.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일 ‘차례진 것은 천대와 멸시,

- 면서 가족 재회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와 관련해 미국 내 한인 비영리단체인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의 이차 회 사무총장은 청년들의 지원이 이산가족 문제를 미국 정부에 호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국무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서한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기대감이 커졌다고 말했음.
 - 이 사무총장은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북한에 있는 직계가족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 만큼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납북자

- 북한, 6·25납북자 발표 비난…“날조·정치적 도발“(3/27,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단체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는 27일 우리 정부의 납북자 발표가 조작됐다고 하며 납북 사실을 부인했음.
 - 협의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정부의 6·25전쟁 납북자 추가 발표를 ‘조작 모략극’이라고 비난하며, 납북자를 선정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우리 정부는 지난 18일 납북 당시 제2대 국회의원이었던 백상규 씨, 대전지법 초대 천안지원장을 지낸 정봉모 씨 등 175명을 납북자로 추가 결정했음.
 - 담화는 “통일 애국을 위해 스스로 공화국(북한)에 들어와 참다운 인생을 살고 오늘도 영생의 삶을 누리는 재북 인사들을 전시납북자로 만들 수 없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재북인사들은 애국열사릉과 재북인사묘에 안장돼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유엔 “北이 약 20여만명의 외국인 조직적 납치” 규탄(3/28, 머니투데이)
 - 유엔 인권이사회가 2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조직적인 납치”를 벌이고 있다며 강도 높게 규탄했음.
 -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북한이 외국인 12개국 출신의 외국

- 인 약 20여 만명을 강제로 납치, 또는 억류했다는 유엔의 조사 결과를 지적하며 이 같이 비난했음.
- 인권이사회는 제28차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27, 반대 6, 기권 14표로 채택했음.
 -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외국인을 포함해 국가 정책적으로 대규모로 자행되는 조직적 납치, 귀환 거부, 지속적인 강제 실종“ 등을 비난했음.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이 “동시대의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으며,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이 최소한 12개국 출신으로 약 20만 명에 달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음.
 - 이들 20만 명 가운데 대부분은 1950~1953년 한국전쟁 직후 북한에 남겨진 남한 출신 사람들이지만 이후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납치되거나 은둔의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방문하던 도중 사라졌음.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남과 간첩들에게 일본어 교육과 일본 관습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북한으로 끌려간 일본인도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은 지난 2002년 일본인 13명을 납치해 간첩 교육 요원으로 활용한 사실을 시인했는데, 이들 13명 가운데 5명은 일본으로 송환됐으나 북한 정부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나머지 8명은 사망했다고만 밝혔음.
 - 북한은 지난해 5월 일본의 제재 해제에 대한 보답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납치된 일본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스웨덴, 대북 의료사업에 7억여 원 지원(3/27, 연합뉴스)
 - 스웨덴 정부가 대북의료지원 사업에 61만 달러(약 6억8천만 원)를 지원했다고 알려짐.
 - 소피아 웬글린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대변인은 23일 “스웨덴 정부가 프랑스 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어전스의 북한 의료지원 사업에 61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 그는 이어 “이번 지원은 2016년 중반까지 프리미어 어전스의 대북의료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스웨덴 정부의 지원금은 황해남도 지역의 병원·보건소 재건, 의료장비 지원, 의술 전수 등에 사용됨.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작년에도 프리미어 어전스의 대북 의료사업에 61만 달러를 지원했음.

- CERF, 200만 달러 대북지원 집행(3/31,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전달된 곳은 세계식량계획, 식량농업기구,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북한에서 식량과 보건 관련 지원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 네 곳임.
 -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중앙긴급구호기금 담당 토마스 드 물 대변인은 전체 대북 지원금 200만 달러의 40%가 세계식량계획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 드 물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지원금이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진한 식량과 보건 분야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 식량 및 농업 분야의 지원금이 총 162만 달러로 전체 대북지원금의 81%임.
 -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는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금 그리고 북한의 농산물 생산 증대를 위해 기술 지원을 하는 식량농업기구 등 3개 기구에 전달됐음.
 - 보건 분야에 지원된 38만 달러는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의 임산부와 신생아의 의료지원에 쓰임.

- 캐나다 NGO, 북한에 메주콩 60t 지원...어린이 두유 제공(4/2, 미국의소리)
 -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두유 제조에 필요한 메주콩 60t을 지원했음.
 - 퍼스트 스텝스가 선적한 메주콩은 캐나다 동부 오타와에서 재배된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일반 콩으로, 중국 대련항을 거쳐 북한의 남포항에 도착함.
 - 이렇게 수송된 메주콩은 남포시와 형제산 구역, 강원도 내 23개 공장에서 역시 퍼스트 스텝스가 지원한 ‘바이타카우’라는 특수기계로 두유로 가공됨.
 - 강원도와 평안남도 내 200여 탁아소와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 10만여 명에게는 퍼스트 스텝스가 제공한 메주콩으로 만든 두유가 매일 제공되고 있음.
 - 스프링클스는 영유아의 영양실조를 막고 성장을 촉진하며, 임산부의 태내 빈혈과 영양결핍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WFP 3월 대북식량지원 40% 증가(4/2,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이 지난달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75만7천5명에게 1천651톤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이 기구의 실케 버 아시아 대변인이 밝혔음.
 - 이는 지난 2월 대북지원 규모(1천190톤)보다 38.7% 늘어난 규모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1천600톤)과는 거의 비슷한 양임.
 - 하지만 역대 최소를 기록한 이 기구의 지난해 월 평균 대북 식량지원(2천270톤)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임.
 - 올 해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는 지난 1월 1천730톤에서 2월 1천190톤으로 31.4% 감소한 바 있음.
 -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국제사회의 모금 부진으로 대북 식량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했음.

8. 북한동향

-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대변인 담화(3.27)】 전시 납북자 추가 명단 발표(3.18) 관련 ‘공화국 북반부에 지진 의거해온 수십 명의 재북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며 ‘전시 납북자 조

작 모략 중단 및 기구 해체' 주장(3.27, 중앙통신·평양방송)

- 그들을 전시납북자로 날조하여 불순한 목적을 꾀하고 있는 것은 재북 인사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정치적 도발임.
- 괴뢰 보수패당은 그 어떤 허위날조로도 통일이애국을 위해 스스로 공화국에 들어와 절세위인들의 품에 안겨 참다운 인생을 살았으며 오늘도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 재북 인사들을 전시납북자로 만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함.
- 불순한 모략소동은 오히려 동족대결과 사대매국에 환장한 저들의 추악한 정체만을 더욱 드러내놓는 것으로 될 뿐임.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3.28), 유엔 인권이사회(3.27)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은 "미국의 對北 적대시정책의 산물, 적대세력들(일본·EU)의 反北 인권모략소동"이라고 반발 및 "초강경 대응" 천명(3.28, 중앙통신)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88호(3.30)】 우리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제28차 회의에서의 '北 인권결의안' 채택(3.27)에 적극 나서며 환영 및 서울에 '北 인권사무소' 설치 추진 관련 '남조선에 등지를 트는 즉시 무자비한 징벌의 과격으로, 타격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3.30, 중앙통신)
 -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겨냥한 미국과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추호도 용납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
 - 유엔의 간판 밑에 北인권사무소라는 모략기구를 서울에 끌어들이 남조선을 국제적인 반공화국 모략범죄의 소굴로 만들려는 조건에서 우리(北)는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모략소굴이 남조선에 등지를 트는 즉시 무자비한 징벌의 과격으로, 첫째가는 타격대상으로 될 것임.
- 미국에서 흑인 남성이 나무에 목이 매달려 숨진 채 발견된(남부 미시시피주) 것과 관련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의 인권실태" 지적 및 미국과 서방의 "인권실태부터 문제시해야 한다"고 주장(4.1, 중앙통신·민주조선)
 - * "미국에서 연속 터져 나오는 인종차별 행위들(백인경찰의 흑인청년 사살, 피부색과 신앙 차별)은 극도의 인간증오 사상으로 물젖은 미국사회의 뿌리깊은 병폐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4.1, 중앙통신 논평/극도의 인간증오 병폐)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추진 등 관련 '체제통일 망상에 사로잡혀 해 덤비는 괴뢰패당의 망동을 절대로 용납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위협하며 '의미심장한 경고는 절대 빈말이 아니다'고 위협(4.2, 중앙통신·노동신문/인권범죄자들의 파렴치한 도발)

© 북한인권연구실 제공